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책임 |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주연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연구진

연구 책임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김주연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21. 09

경 기 복 지 재 단

대표이사 진 석 범

요약

□ 연구목적

-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

□ 추진과정

- 동 협의체 운영현황 조사: 2019-2020년 간 협의체 운영사업, 사업대상, 사업수행 횟수, 자원연계 실적 등 조사
- 사례조사: 운영현황 조사 결과 토대로 7개 동 협의체 대상 사례조사
- 설문조사: 44개 동 협의체 위원 대상 웹 설문조사 2주간 실시
- 선행연구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 추진

□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 첫째, 협의체/통장/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활동 주민 대상으로 체계적인 역량교육 운영
 - 협의체의 사업과 역할은 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범위 내 형성되고 있으므로 동 협의체 위원의 내부적 역량강화와 외부적인 확장이 필요함
 - 이에 동 단위 활동을 하는 다양한 주민 및 단체를 협의체 사업과 연계 및 참여를 목적으로 한 동 단위 시민복지학교를 운영하여 역량강화 시도
 - 또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복지학교 운영을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기획운영 지원 필요
- 둘째, 동 단위 주민참여 방식의 체계적 구분과 역할 분담
 - 최근의 동 단위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이 추진되고 있고 각 동별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상이하게 추진될 수 있음

- 이에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사전 논의와 수원시 차원의 가이드 제공이 필요
- 셋째, 수원시 본청 내 동 단위 주민참여를 위한 업무 연계 활성화
 - 동 단위에서는 각 부서의 업무들이 모여서 수행되지만 상급부서의 업무 가이드에 따라 동일 혹은 유사한 업무가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자치분권과 복지협력과 간 동 단위 행정체계 개편과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련한 모니터링 역할을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함이 필요함
- 넷째, 동 협의체 위원 대상 수당지원 확대
 - 동 협의체는 매달 1만원의 참여수당이 경기도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협의체 위원의 회비로 재사용된다는 점, 통장과 기여도가 유사함에도 실비보전 조차 어려운 낮은 수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동 협의체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협의체 위원 대상 수당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협의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실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시 보장협의체 내 동 협의체를 실무협의체 형태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시 보장협의체 중 전달체계분야, 동 담당 협의체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동 협의체 운영과 마을복지계획 수립 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 정보공유와 기획관리 방안 모색
- 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동 협의체 활동과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지속 추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및 방법	3
II. 동 단위 주민참여 과정과 환경의 변화	5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와 의미	5
2. 마을복지계획 수립 의미와 사례	9
3. 주민자치회 도입과 의미	14
4. 읍면동 중심의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20
III.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분석	24
1.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현황	24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 사업 현황	27
3.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문조사 결과	33
IV.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조사 결과	58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조사 개요	58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FGI 주요 내용 및 결과	65
V.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진단 및 발전방안	80
1. 협의체 위원 대상 체계적 역량강화 교육 운영	80
2. 동 단위 주민참여 방식의 구분	83
3. 수원시의 체계적인 기획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88
4. 정책적 지원 노력의 강화	91
VI. 결론	96
참고문헌	98
부록	99

표목차

<표 II-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변화 추이	7
<표 II-2> 경기도 내 S시의 마을복지계획과 동 협의체 사업계획 간 구성 사례	12
<표 II-3> 주민자치회 필요성	17
<표 II-4> 수원시 주민자치회 구성 조례의 주요 내용	19
<표 III-1> 2019-2020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현황(전체)	24
<표 III-2> 2019-2020년 동 협의체 회의운영 현황	25
<표 III-3> 2019-2020년 동 협의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26
<표 III-4> 2019-2020년 동 협의체 협약기관 현황	26
<표 III-5> 44개 동별 협의체 사업대상 현황	27
<표 III-6> 2019-2020년 사업유형별 개수와 변화	30
<표 III-7> 2019-2020년 동협의체 사업운영의 화폐가치	32
<표 III-8>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4
<표 III-9> 협의체 활동 외 타 사회단체 활동 현황(중복응답)	35
<표 III-10> 동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계기	36
<표 III-11> 동 협의체가 해야하는 역할	36
<표 III-12>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사업 유형(중복응답)	37
<표 III-13> 동 협의체 위원 활동 만족도	38
<표 III-14> 동 협의체 활동하며 불만족하는 이유	38
<표 III-15> 동 협의체 활동하며 만족하는 이유	39
<표 III-16> 회의 시 사업에 대한 의견 논의	39
<표 III-17>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나 이슈 인식	40
<표 III-18> 동에 관한 인식 정도	41
<표 III-19> 4개 구별 동 협의체 위원의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42
<표 III-20> 참여자격에 따른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43
<표 III-21> 현재 살고 있는 동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중복응답)	48
<표 III-22> 예산 결정 자율성 확보 시 가장 하고 싶은 일(중복응답)	48
<표 III-23> 현재 살고 있는 동이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	49
<표 III-24> 동 협의체 참여자격에 따른 동 발전에 대한 인식	50

표목차

<표 III-25> 동 협의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51
<표 III-26> 참여자격에 따른 협의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52
<표 III-27> 동 협의체 위원 선정 시 가장 바람직한 방식	52
<표 III-28> 참여자격에 따른 협의체 위원 선정 시 가장 바람직한 사항	53
<표 III-29> 동 협의체 활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유	54
<표 III-30> 참여자격에 따른 협의체 활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항	54
<표 III-31> 동 협의체 활동에 적당한 구성 인원	55
<표 III-32> 참여자격에 따른 동 협의체 활동에 적당한 구성 인원	55
<표 III-33> 주민자치회 인지 여부	56
<표 III-34> 주민자치회, 동 협의체 운영방식	56
<표 III-35> 참여자격에 따른 주민자치회, 협의체 운영 방식	57
<표 IV-1> 동 협의체 사례조사 대상	59
<표 IV-2> 동 협의체 FGI 참여자	60
<표 IV-3> FGI 공무원용 질의항목	61
<표 IV-4> FGI 민간위원장용 질의항목	62
<표 V-1>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시군과 해당 시군의 마을복지계획 수립 현황 ..	84
<표 V-2>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및 주민참여 방식	86
<표 V-3> 동 협의체 연간 운영실적 취합을 위한 보건복지부 관리 양식	89
<표 V-4> 동 협의체 사업별 모니터링 양식(예시)	90
<표 V-5> 동 협의체,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93
<표 V-6> 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안)	95

그림목차

<그림 I -1> 연구추진체계	4
<그림 II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정책추진방향	10
<그림 II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읍면동 조직·인력 모델	21
<그림 II -3> 읍면동 내 주민참여 관련 신규 업무	22
<그림 II -4> 마을복지계획의 구조적 중복	23
<그림 III-1> 2019-2020년 협의체 사업유형 현황	29
<그림 III-2>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①	44
<그림 III-3>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②	44
<그림 III-4>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③	45
<그림 III-5>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④	45
<그림 III-6>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⑤	46
<그림 III-7>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⑥	46
<그림 III-8>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⑦	47
<그림 IV-1> 인터뷰 철사 자료를 통해 생성한 태그(tags)	63
<그림 IV-2> 태그(tags)의 의미단위의 분류	64
<그림 IV-3> 의미단위의 연결	79
<그림 V-1> 서울시 동 복지대학 운영 사례	81
<그림 V-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된 ‘(가칭)동 시민복지대학’	82

I. 서론

1 연구배경

□ 연구의 배경

- 복지와 돌봄의 국가 책임론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종전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으로 운영되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제도적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지속적인 확장추세에 있음
 -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정책 기준선(reference line)에 해당해야만 사회적 보호의 범위에 속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른 제도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적 위험에 처한 사각지대가 점차 커지고 있음
 - 특히 사회보험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제도임으로 사회 보장체계 전반을 두고 볼 때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음
 - 공공부조의 경우는 대부분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별하게 됨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한계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제도의 기준에서는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단위에서 노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이 필요하게 됨
-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과 제공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강조
 - 동법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제시하여 정부의 책무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역 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
 -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2016년부터 “읍면동 허브화”를 추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읍면동의 기능이 내방 민원에 대한 행정적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

- 동시에 가구방문과 민관협력을 의무화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함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여 지역 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 구성됨

○ 수원시는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2년부터 44개 동(洞)단위로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다, 2015년 법 제정이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

- '12년부터 추진된 “주민복지협의체”부터 '16년 이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의 전환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과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시행

○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성에 따라 주민의 주도성을 강조하지만 수원시 44개 동별로 환경과 조건, 주민의 구성 등이 상이함으로 동일한 수준의 사업이나 효과가 나타날 수 없음으로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을 시도하여야 함

-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주민과 법령에 따라 법정사무로 구성하고 운영지원해야 하는 공공 간에는 각자의 사정이 다름으로 이를 고려하여 주민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최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의 정책적 변화와 과제는 각 동별 보장협의체의 활동과 향후 방향을 고민하여야 하는 시기 도래

- 특히 주민자치회 등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부문에 대한 정책설계와 연구 등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및 점검해 오고 있음

· 수원시의 경우도 2021년 8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주민협치, 마을공동체 등 부문에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참여민주주의를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는 국가나 경기도 차원에서 실적취합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과 성과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음

- 따라서 2012년부터 운영되어 온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함이 필요
- 그 동안 지역 내 주민의 복지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해 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금번 계기를 통해 협의체의 운영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제시

- 첫째,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현황 파악
- 둘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기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선행연구자(전준구, 2020; 안기덕, 2019; 허숙민, 2019; 채현탁, 2017; 함철호, 2017)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 협의체 쟁점과 활성화 내용제시의 공통적 요인을 도출
 - 주민자치회 및 마을복지계획 등에 대한 선행연구(김동철, 2021; 김남욱, 2021; 박광표, 2020; 박상범, 2019; 하경환, 2019; 김필두, 2018 등)들의 주요 방점과 제도적 방향성을 도출
- 운영현황 조사
 - 2019년, 2020년 기준 44개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운영 현황 조사
- 사례조사
 - 운영현황 조사와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결과 우수 동으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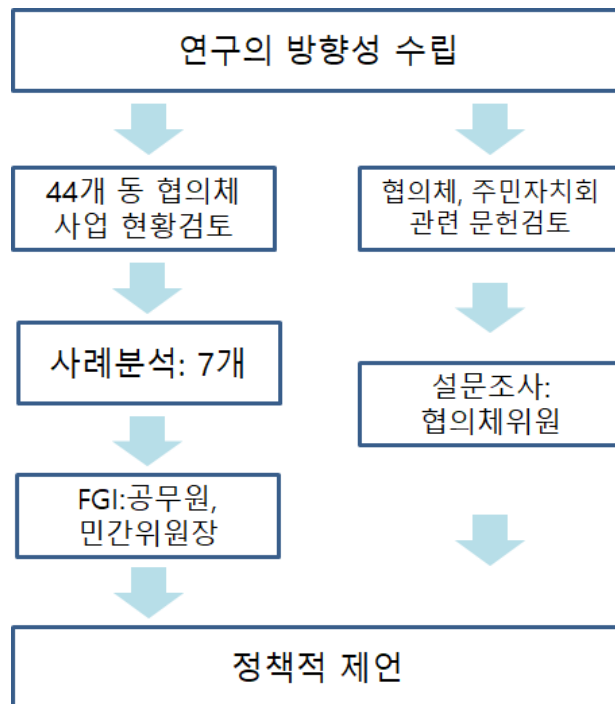
정된 동을 대상으로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조사

- 사례조사 시 공무원과 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 설문조사

- 4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공공 및 민간위원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협의체 활동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II. 동 단위 주민참여 과정과 환경의 변화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와 의미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구조와 역할

□ 읍면동 단위의 서비스 제공역량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변화

- 2014년 5월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행정동(行政洞) 단위의 복지 기능의 강화가 추진되었음
 - 행정동은 행정적 편의와 포괄범위(인구 등)에 따라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단위의 행정기관임으로 정부의 인력배치와 업무변화의 노력과 주민의 참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점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동시에 추진
 - 공공영역에서는 인력증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노력 실시
 - 동시에 제도적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영역에서 주민의 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행정동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 인력에게 도전이 되고 있음
 - 첫째, 지역 내 주민이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화 된 창구로서의 읍면동 역할을 설정한 것임
 - 공공의 역할 또한 내방민원에 대한 응대 방식의 업무처리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역할이 강화
 - 읍면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사례관리와 가구 방문,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등을 전담하는 팀 구성
 - 2017년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개편하며 맞춤형복지팀은 보건복지팀으로 개편하고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방문상담의 기능강화

- 둘째, 정부의 역할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를 관리하는 측면을 넘어 주민과 관계를 맺고 주민의 활동을 촉진 및 활용하는 역량을 요구하는 것임
 - 사각지대는 제도적 기준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발굴되지 않으며 발굴 이후 공적인 제도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협력 및 민간자원 연계 활동이 중요한 행위로 강조됨
 - 이는 주민단체(혹은 사회단체)와 지역주민과 공공과 지역의 공적인 문제(사각지대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역할로서 정부의 조정자 및 촉진자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공공의 업무 범위도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단위의 주민참여와 협력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동 단위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의 사회보장급여 이용과 제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위해 주민과 협력하여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는 구별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 시군구 단위 설치되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의기구로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설치·운영의 법적근거 정비된 후 '05년 7월부터 시행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안단체시설의 대표자 등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기구
 - 주요한 기능으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지역사회내 사회보장사업 추진사항 등을 심의·자문 역할임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핵심역할을 수행
- 2015년 7월 이후 (약칭)사회보장급여법이 신설되면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접적 근거를 강화

- 「사회보장급여법」은 보장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공법적 행위)¹⁾에 관한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과는 다르며 이를 구분하고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된 것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내 근거를 두고 있었던 지위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된 것은 보장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는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는 기본적 법률관계를 갖게 됨

〈표 II-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변화 추이

구 분	'05.7.31. 이전	'05.7.31.~'15.6.30.	'15.7.1. 이후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명 칭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 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성 격	심의/자문기구	심의/자문기구 탈피	기능 강화
비 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 확대	기존 사회복지에서 탈피하여 사회보장으로 범주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2015)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단위에 설치되는 기구로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공공의 복지전달체계 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를 위해 설치 운영됨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역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7항에 따라 2017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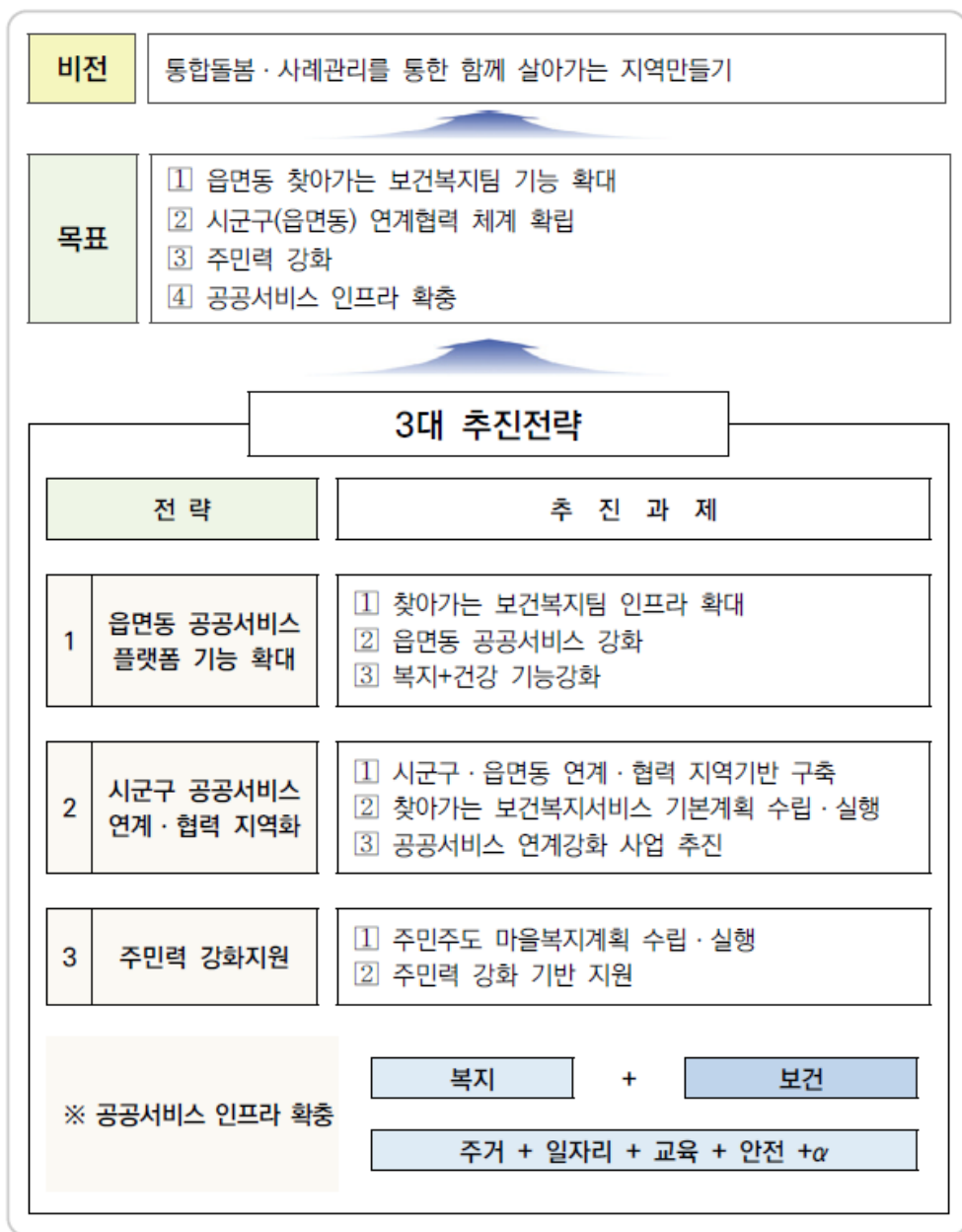
1) 사회보장급여법에는 민간법인, 단체, 개인, 복지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오로지 보장기관의 역할과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발굴”과 “연계”역할로 설정됨(시행규칙 제7조 1항의 1~4)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 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마을복지계획 수립 의미와 사례

- 마을복지계획은 '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 사업계획 외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 점차 확산되어 '21년에는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읍면동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마을복지계획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해 읍면동에 보건복지팀을 신설하면서 해당 팀의 주요 업무로 제시되어 있음
 - 이는 '16년부터 시작된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그 맥락이 연계되어 이어져 오고 있는 읍면동 중심의 기능강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강화를 시도하는 것임
- '16년부터 시작된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17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특징은 주민참여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 활동을 강조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각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하여 공공의 찾아가는 서비스와 사례관리 기능강화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및 연계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현 정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통합돌봄·사례관리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만들기”를 비전은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추진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주민력 강화”라는 하위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제시
 -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내 다양한 주민조직과 협업하여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계획임

〈그림 Ⅱ-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정책추진방향



□ 경기도 내에서 '20년~'21년 사이 대부분의 시군에서 읍면동별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전 준비 및 실행하고 있음

-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거나 '21년 9월 현재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음
 - 그러나 시군 내 전 읍면동에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직 아니며 각 시군에서는 2~3개 읍면동에 시범으로 수립 후 점차 확대하여 시행하는 추세임
- 수원시의 경우도 44개 동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을 실시('21년 9월)하였고 매뉴얼 사전 개발 후 추진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

□ 마을복지계획은 계획수립의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계획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읍면동 단위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복지계획 수립 담당은 보건복지팀 혹은 맞춤형복지팀에 부여되어 있으나 시군 단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 업무담당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담당이 구분되어 있음
- 중앙부처의 경우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연계하고 있지만 마을복지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어느 기구에서 책임을 갖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부재하여 읍면동 단위에서는 혼선이 야기
 - 물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상에는 읍면동의 보건복지팀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지만, 읍면동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라는 제언일 뿐 동 협의체 기존 연간 운영계획과의 관계 및 차별성,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과의 역할, 주민자치회 내 복지분과 간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
 - 이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단을 조직하여 계획 수립하고 실행까지 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수립하고 있음
 - 이렇게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별도의 실행단 구성은 동 협의체 기존의 역할과 활동에 중복이 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경기도 내 S시의 마을복지계획 수립 사례를 보면 마을복지계획과 동 협의체 사업이 대부분 유사하게 구성되고 있음

- 대부분의 동에서는 동 협의체 연간 사업 내 마을복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및 관리 하고 있으며 실행단과 협의체 위원도 “의도적 중복”하여 구성
 - 가령, 동 협의체 연간 사업 계획이 10개라면 이중 약 4~6개가 마을복지계획 사업이며 나머지 사업은 동협의체 사업으로 구성함으로써 마을복지계획의 실행이 동협의체 위원에 의해 운영되도록 구성
 - 또한 마을복지계획실행단 역시 동협의체 위원의 상당 수와 일부 타 단체 및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하여 마을복지계획실행단의 활동이 동 협의체 활동과 중복 및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구성함(아래 표 참조)

〈표 II-2〉 경기도 내 S시의 마을복지계획과 동 협의체 사업계획 간 구성 사례

사례 연번	내용	협의체 사업과 마을복지계획 구성 사례
1	-마을복지계획: 3개 사업 ※1개 사업이 협의체 사업과 일치 -마을복지계획실행단(총18명)이 실행 -협의체 위원 총23명	-동 협의체 사업에 추가적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 · 이행 하며 실행단과 협의체 위원이 겹칩
2	-마을복지계획: 4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총37명)이 실행 -협의체 위원 총33명	-협의체 사업: 4 -협의체 사업>마을복지계획
3	-마을복지계획: 4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23명 -협의체 위원: 27명	-협의체 사업: 6 -협의체 사업>마을복지계획
4	-마을복지계획: 2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별도 구성 無 *협의체 중심의 계획 수립 -협의체 위원: 18명	-협의체 사업: 3 -협의체 사업>마을복지계획 -협의체=실행단
5	-마을복지계획: 2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별도 구성 無 *협의체 중심의 계획 수립 -협의체 위원: 29명	-협의체 사업: 11 -협의체 사업>마을복지계획 ※마을복지계획 2개중 1개사업은 협의체 사업 외 별도 추가됨 -협의체=실행단
6	-마을복지계획: 2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별도 구성 無 *협의체 중심의 계획 수립 -협의체 위원: 18명	-협의체 사업: 4 -협의체 사업>마을복지계획 -협의체=실행단

II. 동 단위 주민참여 과정과 환경의 변화

사례 연번	내용	협약체 사업과 마을복지계획 구성 사례
7	-마을복지계획: 1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24명(협약체+주민자치회6명) -협약체 위원: 23명	-협약체 사업: 5 -협약체 사업=마을복지계획
8	-마을복지계획: 4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27명(협약체14, 주민 11, 복지관 2) -협약체 위원: 16명	-협약체 사업: 11 -협약체 사업=마을복지계획 ※마을복지계획 4개중 2개 사업은 협약체 사업 외 별도 추가됨
9	-마을복지계획: 4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협약체 13+통장 5명 -협약체 위원: 13명	-협약체 사업: 5 -협약체 사업=마을복지계획 ※마을복지계획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유사(1개의 사업에서 수반하는 활동으로 판단됨)
10	-마을복지계획: 6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16(협약체 9, 통장 2, 시민 3) -협약체 위원: 15명	-협약체 사업: 5 -협약체 사업=마을복지계획 -협약체 사업 4개 사업에 마을복지계획 사업 2개 추가됨
11	-마을복지계획: 1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17명 -협약체 위원: 22명	-협약체 사업: 7 -협약체 사업=마을복지계획 -마을복지계획실행단과 협약체 위원 중 일부가 겸업으로 파악됨
12	-마을복지계획: 11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별도 구성 無 -협약체 위원: 32명	-협약체 사업: 11 -협약체 사업=마을복지계획
13	-마을복지계획: 3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별도 구성 無 -협약체 위원: 16명	-협약체 사업: 6 -협약체 사업=마을복지계획
14	-마을복지계획: 1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협약체 + 주민공모 -협약체 위원: 미파악	-협약체 사업: 6 -협약체 사업=마을복지계획
15	-마을복지계획: 1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별도 구성 無 -협약체 위원: 13명	-협약체 사업: 3 -협약체 사업, 마을복지계획 각 별도
16	-마을복지계획: 3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40명(협약체 18, 통장 22) -협약체 위원: 13명	-협약체 사업: 9 -협약체 사업=마을복지계획
17	-마을복지계획: 2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별도 구성 無 -협약체 위원: 18명	-협약체 사업: 6 -협약체 사업=마을복지계획
18	-마을복지계획: 3개 사업 -마을복지계획실행단: 19명 -협약체 위원: 18명	-협약체 사업: 4 -협약체 사업=마을복지계획 -협약체사업과 마을복지계획 사업이 유사하다고 판단됨

3 주민자치회 도입과 의미

□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과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기구임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제도 기반 및 공론장으로서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2021)

-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욱 확장된 업무 기능을 가짐(특별법 제28조)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 주민자치회를 통해 3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나아가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을 위한 사업실행법인 구축단계까지도 추진 중에 있음(행정안전부, 2021)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짐

-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로 대변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문제의 해결을 한다는 원리가 반영된 것임(곽현근, 2017; 최인수·전대욱·장인성, 2020)
 - 이는 단지 마을 단위의 주민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
 - 단순히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서 주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민주주의 혁신적 의미를 지님

- 마을의 집합적인 역량을 키우고, 이러한 공동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지방정부가 반응하게끔 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의미함(최인수·전대욱·장인성, 2020)
 -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 △주민자치회 등 각기 파편화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상호 보완적인 제도적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함

○ 곽현근(2017), 최인수·전대욱·장인성(2020)등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 속 주민자치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수평적 참여와 수직적 참여)

- 첫째, 정부가 마련한 제도 참여와는 무관하게 주민들 스스로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임
 - 이와 같은 유형의 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결사체적 활동에 뿌리를 두고 주민들 사이의 대등한 관계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참여’의 성격을 가짐
- 둘째, 주민들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참여제도를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 및 서비스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것임
 - 이러한 유형에서 참여는 합법적 권력과 자원을 가진 공식기관인 국가(행정)와 주민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직적 참여’의 성격을 가짐
 - 이는 주민참여가 정부의 행정기능의 수행을 위한 기능적 차원에서 정부 유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 속 주민자치는 수평적 및 수직적 참여 모두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임(곽현근, 2017)
- 주민자치는 ‘친숙한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임
- 뿐만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공식제도에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가 참여하면서 정부 또는 다른 지역공동체와 함께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과 관련된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함(곽현근, 2017)
- 무엇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참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참여제도에의 참여까지를 주민자치의 의미에 포함시킴
 - 주민자치를 마치 지방정부와는 독립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정부서비스의 보완 또는 보충 수단으로서 주민활동을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곽현근, 2015)

-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마을 및 동네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 형태, 근린생활공간 단위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창출·제공하는 의사결정주체(이현우·최준규, 2019)임
 -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필요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읍면동 수준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 측면에서 그 의미가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 최인수·전대욱·장인성(2020)은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II-3〉 주민자치회 필요성

필요성	주요 내용
① 근린 수준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에게 맡겨둠 ■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구심점이 됨 ■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최선의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협력적 거버넌스는 참여민주주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과정으로서 강조되고 있음
② 지방자치의 중심 축 변화에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중심의 단체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변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했던 권한 중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근린생활기능의 주민 직접 수행을 위해 주민의 자기결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써 필요함
③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의한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주민자치조직이 필요함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근린자치지원기능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근린자치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양자 간의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④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은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하고 민간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가장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 단위임 ■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민중심 지역분권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민자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주민자치를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지원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으며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민조직이 필요함
⑤ 주민과 주민주권의 대표적, 민주적 권한자로서의 주민자치회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주민단체, 시민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부여받는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필요함 ■ 읍·면·동 단위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주권 실현의 대표적 주민조직으로서의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 대표조직인 읍면동 주민센터와 읍면동장, 주민의 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가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지역사회 주민총회를 통해 중요사항이 의결되고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며 항시적 집행적 의결기구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음

출처: 최인수·전대욱·장인성(2020)

- 주민자치회는 '20년 기준 전국적으로 626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수원시는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0.07.10.)하여 8개 동에 시범사업 실시
 -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에서는 주민자치회 기능을 제시하고 있음
 -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3.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제8조(권한)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협의, 위탁,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협의업무 : 동 단위 지역발전 계획, 도시경관 협약, 각종 농·축산 지원 사업 등 동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 내 행정구역 변경 계획, 혐오시설 주변 주민 간 의견 수렴 등 주민 간 이해 조정 업무'
 - '2. 위탁업무 : 주민자치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공공시설물 및 마을 휴양지 관리 등'
 - '3. 주민자치업무 :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업무로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육아시설 운영 등'
 - '21년 현재 시범사업 실시 동: 율천동, 송죽동, 서둔동, 호매실동, 행궁동, 인계동, 매탄2동, 광교1동

〈표 II-4〉 수원시 주민자치회 구성 조례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등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30명~50명 이내
제8조(권한)	1. 협의업무 : 동 단위 지역발전 계획, 도시경관 협약, 각종 농·축산 지원 사업 등 동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 내 행정구역 변경 계획, 혐오시설 주변 주민 간 의견 수렴 등 주민 간 이해 조정 업무 2. 위탁업무 : 주민자치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공공시설물 및 마을 휴양지 관리 등 3. 주민자치업무 :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업무로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육아시설 운영 등
제9조(위원의 선정)	위원의 선정: 수원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수원시장 위원의 공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을 1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고 위원의 구성 -총원의 60퍼센트 :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공개 추천된 사람 중 선정 -총원의 40퍼센트 : 해당 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그밖에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선정
제13조(분과위원회)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구성
제13조의2(주민총회)	연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주민총회의 결정 권한(참석한 주민의 과반수 찬성)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마을자치계획안 4. 동의 주민세환원사업 계획안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계획안 5.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제13조의3(마을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마을자치계획을 수립. ② 마을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

4 읍면동 중심의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 현 정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을 통한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 읍면동은 정부의 행정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기관으로서 행정과 주민이 만나는 접점으로서 의미가 있는 정책적 지점이라 볼 수 있음
- 최근 종합행정으로서 읍면동의 기능이 부각되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중앙부처 단위에서 각각 설계되어 하달되어 읍면동에서는 혼란이 발생
-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읍면동의 공무원인력 확충, 주민참여와 협력, 주민자치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는 정책임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크게 행정안전부 주도의 “주민자치분야”와 보건복지부 주도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로 구성됨
 - 두 사업 모두 읍면동의 역할과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이며 이를 위해 공무원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주민자치 역량 및 업무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조직이 구성되며 기본형의 경우 기존 복지허브화의 기본형과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행정팀에 주민자치 전담인력이 1명,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인력이 1명 추가된 형태임
 - 확장형은 기본형의 발전된 형태로 인력확충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읍면동 종합상담 기능 확대, 지역의 공공서비스 연계기능 강화 등을 실질화하는 유형임
- “지방자치분야”에서는 주민 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복지분야”에서는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등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추진

〈그림 II-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읍면동 조직·인력 모델

구분	모델	기능	조직	인력 구성*
읍·동	기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상담, 통합사례 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건강 서비스 주민 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팀) 자치 1명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3명, 간호 1명
	공공서비스 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범위 확대 종합상담 실질적 민·관연계 주민 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팀) 자치 1명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7명, 간호 1명
면	기본형	읍·동 기본형 모델과 동일		
	농어촌 특성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형 모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미설치(전담 인력만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 1명, 복지 2명, 간호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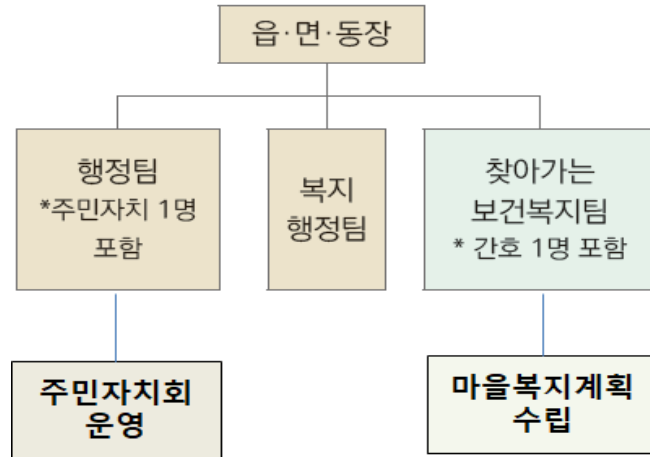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2021)

□ 인력확충에 따라 주요업무의 확대되면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민관연계사업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이 새로운 업무에 포함

○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내 다양한 주민조직과 협업하여 수립하고, 협업 기반조성을 위해 소통 및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는 하나의 사업형태임

- 공공행정에서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주민 스스로 기획하는 회의·워크숍 형태의 교육운영, 장소마련을 위해 행정적 지원함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 그 과정 자체에서도 주민주도성을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것임
-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소규모 의제에 대해 주민들의 문제 확인·해결능력 제고를 지지하고 주민중심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이 마을복지계획에 포함하고 있음

〈그림 II-3〉 읍면동 내 주민참여 관련 신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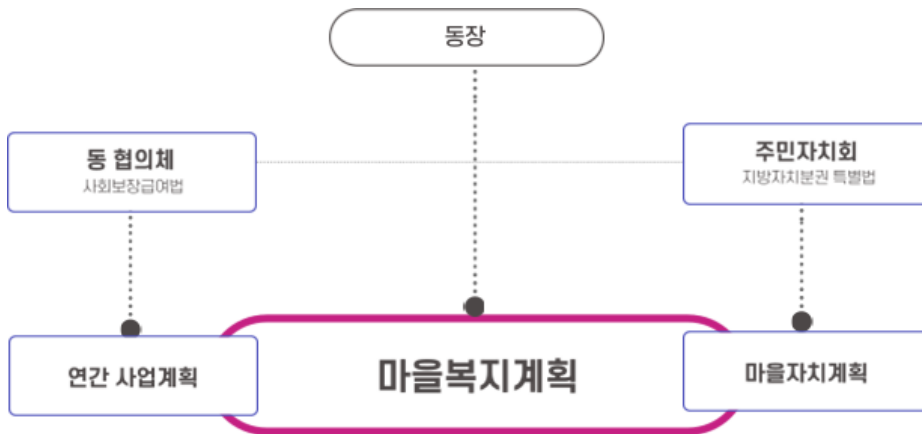


□ 마을복지계획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업무로 분장되어 있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리 또한 동일 팀에서 관리함으로 업무가중 및 혼란 발생

- “마을복지계획 수립”은 동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간 사업계획과는 별도로 수립되기 때문에 특화사업과 어떠한 관계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협의체 위원의 혼란 발생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업무매뉴얼 상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주민조직과 주민자치회 협업, 주민총회 상정 가능, 마을자치계획과 연계가능,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가능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오히려 각 시군의 마을복지계획 관련 담당자 간 해석이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마을복지계획 수립체계 또한 중복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마을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별도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 주민참여단은 한시적 TFT가 아닌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실행하는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주민협력기구임

-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즉, 주민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촉진과 조정역할이 필연적인데,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주민참여단의 별도 구성은 기존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중복성, 사업의 중복성 등이 발생
 - 주민참여와 사업을 위한 공공의 업무조정 및 연락, 위원 위촉관리 등 추가적인 사무가 더 증가하게 되며 이는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복지계획과 동 지역사회보장계획 특화사업 간 내용은 같으나 행정지원 체계는 이원화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2022년부터 동지역사회보장계획 중단)

〈그림 II-4〉 마을복지계획의 구조적 중복



□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은 마을복지계획의 소관 및 실행주체에 대한 혼란이 가중

-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복지분과’,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읍면동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위원의 중복적 참여로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음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상당 수가 마을복지계획실행단에 포함되기도 하며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에도 소속되기도 함
 - 그러나 소수의 협의체 위원이 유관한 사업에 공동으로 포함되는 방식과 각각의 단체나 기구가 독립적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방식과는 그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음

Ⅲ.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분석

1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현황

□ 수원시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원시 행정동에 따라 44개 지역에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음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 소관 팀장, 주무관이 포함되어 약 20명으로 구성되며 65%가 지역주민으로 구성
 - 44개 동 협의체의 구성 중 가장 많은 비중은 기타 및 지역주민이 2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는 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복지기관 종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과 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 이외는 해당 동에 거소 혹은 사업장을 둔 지역주민이라고 볼 수 있음으로 사실 상 65%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주민자치위원’과 ‘자영업자’, ‘의료인’ 등의 참여가 소폭 감소
 - 2년 마다 협의체 위원의 재위축 및 신규 위축이 이루어짐으로 각 동별로 위원구성의 주기마다 연도별 위원구성이 바뀔 수 있음
 - 모든 위원이 신규로 위촉되는 것이 아님으로 참여위원의 구성은 2년 마다 소수의 위원만 변경됨

〈표 Ⅲ-1〉 2019-2020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현황(전체)

연도	계	복지기관 종사자	공무원	동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회원	부녀회장	종교인	의료인	교육복지 관계자 (교사등)	자영업자 (상가변영 회원등)	우체국 관계자	비영리 단체 추천자	기타 지역 주민
2020	836	167	132	97	14	34	9	27	20	36	114	1	14	171
	100%	20.0	15.8	11.6	1.7	4.1	1.1	3.2	2.4	4.3	13.6	0.1	1.7	20.5
2019	894	182	132	92	59	25	9	28	28	34	138	0	12	155
	100%	20.4	14.8	10.3	6.6	2.8	1.0	3.1	3.1	3.8	15.4	0.0	1.3	17.3

□ 정례적인 회의 진행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복지 환경변화에 즉각적 대응 노력

- 대부분의 동에서는 매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높은 회의 참석율(78%, 평균 16명)보임
 - 2019년에 비해 2020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었음
- 협의체 월별 정기회의에서는 주로 자원발굴과 특화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사각지대 발굴조사와 지역자원발굴 및 연계에 논의가 급격히 증가
 - 2020년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해 2019년에 비해 월별 모임 및 특화사업에 대한 내용은 줄어들었으나 사각지대 발굴조사와 지역자원발굴 및 연계 주제의 논의는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

〈표 III-2〉 2019-2020년 동 협의체 회의운영 현황

연도	회의 개최 (회)	참여인원 누계(명)	소계	회의운영 현황(연간 누계)						
				운영세칙 마련, 변경	위원장 선출	복지대상자 지원결정 (지원방안)	사각지대 발굴조사	지역자원 발굴, 연계	특화사업 기획, 운영	그외 지역복지 관련사항
2020	284	4,753	3,997	11	76	842	1,014	1,468	366	220
2019	482	7,506	3,455	31	108	617	664	779	768	488

□ 2019년-2020년 사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건수는 증가하였으며 특화사업 수는 감소

- 코로나 19로 인해 사각지대 발굴의 빈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지원건수는 증가 하였음
 - 2019년 사각지대 발굴 가구는 12,940가구이며 서비스 연계는 16,585건이며 2020년 사각지대 발굴 가구는 18,095가구이며 서비스 연계는 22,984건으로 2019년에 비해 상승함
 - 그러나 자원발굴의 금액은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

〈표 Ⅲ-3〉 2019-2020년 동 협의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구분	사각지대대상자발굴 (가구)	민간 자원발굴		자원연계
		자원발굴 (건)	자원발굴 금액 (천원)	서비스연계(건)
2020	18,095	2,704	881,232	22,984
2019	12,940	2,326	983,818	16,585

□ 동 협의체 계좌를 통한 누적 지정기부 액수는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사업수와 지원 건수는 증가

- 2020년은 협의체의 공동모금회 계좌의 금액이 감소하였으며 특화사업과 예산 도
2019년에 비해 감소
 - 2019년 기준 특화사업 수는 수원시 전체 483개였으며 이는 1개 협의체 당 약 11개의
특화사업을 추진
 -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체 166개 사업으로 특화사업이 감소하였으며 1개
협의체 당 약 4개 사업을 추진

〈표 Ⅲ-4〉 2019-2020년 동 협의체 협약기관 현황

구분	협약기관 계좌모금액	특화사업	
		사업 수	예산
2020	470,971	150	217,642
2019	848,961	335	386,212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 사업 현황

- 44개 동 협의체 사업대상은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대상은 사업의 속성이 유사
 - 협의체의 특화사업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함으로 위기상황 혹은 사회적 위험 노출된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19년, '20년 44개 동에서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대상은 노인이며 그 외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기타 순으로 나타남
 - “기타”의 경우는 특화사업이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모금 및 배분 사업이 대다수를 구성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학용품 및 장학금/용돈을 지원하는 사업임이 일부 프로그램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음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식사지원이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학용품과 장학금지원/용돈지원 등이 주요한 구성을 차지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외에는 사업의 속성과 내용이 유사하며 이는 곧 주민이 활용가능한 자원범위 내에서 사업이 수행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표 Ⅲ-5〉 44개 동별 협의체 사업대상 현황

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취약		아동청소년		기타		총계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고등동	4	2	0	0	4	3	0	1	1	2	9	8
곡선동	1	0	0	0	2	1	1	1	0	1	4	3
광교1동	0	0	0	0	0	0	0	0	1	2	1	2
광교2동	8	3	0	0	2	0	2	1	0	0	12	4
구운동	2	1	0	0	1	0	0	0	1	1	4	2
권선1동	5	1	0	0	1	0	0	0	0	1	6	2
권선2동	4	2	0	0	1	1	0	0	0	0	5	3
금곡동	4	1	0	0	2	1	0	0	1	1	7	3
망포1동	0	0	0	0	0	0	0	0	0	1	0	1
망포2동	2	0	0	0	3	2	0	2	0	0	5	4
매교동	4	1	0	0	1	0	0	0	1	0	6	1
매산동	7	0	0	0	1	0	1	0	2	0	1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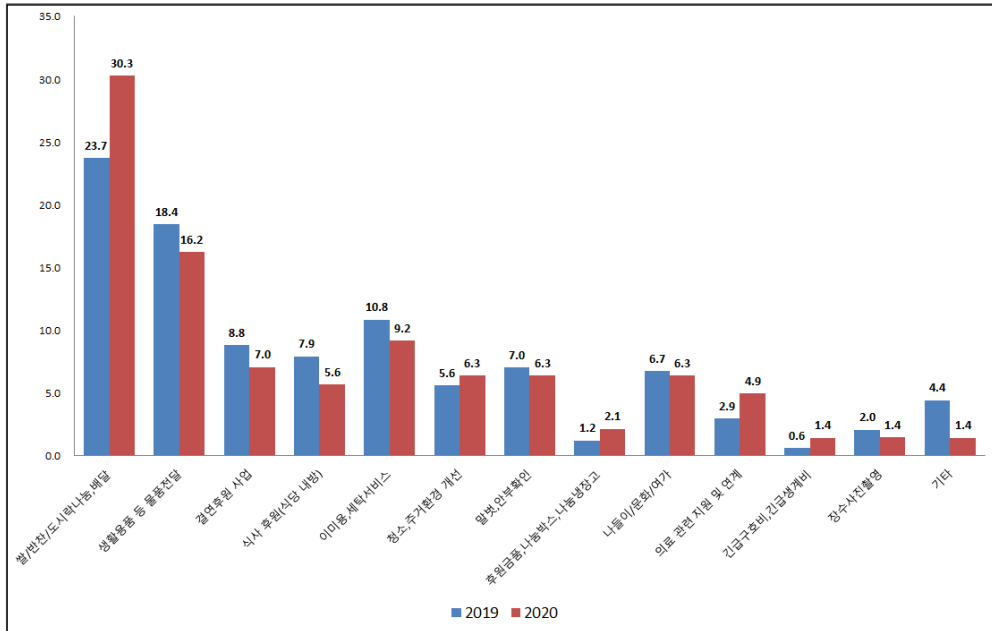
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취약		아동청소년		기타		총계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매탄동	1	0	0	0	11	7	2	0	1	0	15	7
매탄2동	3	4	0	0	0	0	0	0	2	0	5	4
매탄3동	7	2	0	0	2	0	0	1	1	0	10	3
매탄4동	3	1	0	0	2	1	2	1	0	0	7	3
서둔동	4	3	0	0	0	1	2	0	3	2	9	6
세류1동	1	1	0	0	1	0	1	0	3	0	6	1
세류2동	4	2	0	0	6	2	3	1	1	1	14	6
세류3동	2	1	0	0	0	1	1	1	2	3	5	6
송죽동	6	1	0	0	4	0	2	0	0	0	12	1
연무동	4	3	0	0	5	2	0	0	1	0	10	5
영통1동	1	1	0	0	5	3	1	0	1	1	8	5
영통2동	2	0	0	0	2	2	0	0	0	1	4	3
영통3동	1	1	0	0	5	1	0	0	2	0	8	2
영화동	2	3	0	0	1	1	3	1	2	1	8	6
우만동	4	1	0	0	0	0	1	1	0	0	5	2
우만2동	0	1	0	0	0	0	0	0	1	1	1	2
원천동	3	0	2	1	2	2	2	0	0	0	9	3
율천동	4	0	0	0	7	1	2	0	1	0	14	1
인계동	7	1	0	0	0	1	1	0	1	3	9	5
입북동	3	0	0	0	0	1	1	0	0	1	4	2
정자동	5	2	0	0	4	0	1	0	1	0	11	2
정자2동	3	2	1	0	0	0	1	0	5	3	10	5
정자3동	2	0	2	0	4	4	0	0	1	0	9	4
조원1동	2	1	0	0	5	2	1	1	2	1	10	5
조원2동	1	1	0	1	1	1	0	0	1	1	3	4
지동	2	1	0	0	0	0	0	0	1	2	3	3
파장동	8	0	1	1	1	0	2	0	1	2	13	3
평동	4	3	0	0	2	0	2	0	1	1	9	4
행궁동	0	2	0	0	6	3	0	0	2	0	8	5
호매실동	6	2	2	2	1	0	2	0	2	0	13	4
화서1동	2	1	0	0	3	1	0	0	1	2	6	4
화서2동	0	0	0	0	6	0	0	0	1	1	7	1
총계	138	52	8	5	104	45	37	12	48	36	335	150
구성비	41.2	34.7	2.4	3.3	31.0	30.0	11.0	8.0	14.3	24.0	100.0	100.0

□ 44개 동의 사업유형을 구분하면 약 12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식료품 나눔에 대한 사업이 약 30%의 비중을 차지함

- 동 협의체 사업은 주로 쌀/반찬/도시락 배달, 생활용품 등 식사류와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사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
 - '19년의 경우 쌀/반찬/도시락 나눔·배달, 생활용품 등 물품전달, 이미용 및 세탁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년의 경우도 역시 쌀/반찬/도시락 나눔배달, 생활용품, 이미용 및 세탁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9년도에 비해 식료품 나눔 사업 비중이 커진 것은 코로나로 인해 집합적인 특성을 가진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기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증가된 것처럼 나타남

〈그림 Ⅲ-1〉 2019-2020년 협의체 사업유형 현황



- '20년 코로나 팬데믹은 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합적 활동을 축소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수도 상당 부분 감소하였지만 사업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건수 측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생활용품 등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의 경우가 많이 사업이 감소
- 사업별 감소율이 가장 큰 사업은 “기타” 유형으로 행사와 함께 하는 모금활동, 장터, 축제 등등의 큰 규모의 행사성 사업이며, 그 외 장수사진촬영, 식사후원(식당 내방) 사업이 7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대면 중심의 많은 위원이 참여하는 행사는 감소세가 두드러짐

- 긴급구호비,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 사업을 제외한다면 가장 감소추세가 적은 사업은 의료관련 지원 및 연계와 대면접촉이 비교적 적은 후원금품 나눔 박스 및 나눔공간 등에 관한 사업임
- 특징적인 것은 주로 비대면으로 추진 될 수 있는 결연후원 사업의 경우도 상당부분 (66.7p%)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위원이나 지역사회 후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표 Ⅲ-6〉 2019-2020년 사업유형별 개수와 변화

사업유형	연도	사업 수(건)	사업 감소 건수	사업별 감소율(%)	비중(%)	증감(p%)
쌀/반찬/도시락나눔,배달	2020	43	38	△46.9	30.3	6.6
	2019	81			23.7	
생활용품 등 물품전달	2020	23	40	△63.5	16.2	△2.2
	2019	63			18.4	
결연후원 사업	2020	10	20	△66.7	7.0	△1.7
	2019	30			8.8	
식사 후원(식당 내방)	2020	8	19	△70.4	5.6	△2.3
	2019	27			7.9	
이미용,세탁서비스	2020	13	24	△64.9	9.2	△1.7
	2019	37			10.8	
청소,주거환경 개선	2020	9	10	△52.6	6.3	0.8
	2019	19			5.6	
말벗,안부확인	2020	9	15	△62.5	6.3	△0.7
	2019	24			7.0	
후원금품,나눔박스,나눔냉장고	2020	3	1	△25.0	2.1	0.9
	2019	4			1.2	
나들이/문화/여가	2020	9	14	△60.9	6.3	△0.4
	2019	23			6.7	
의료 관련 지원 및 연계	2020	7	3	△30.0	4.9	2.0
	2019	10			2.9	
긴급구호비, 긴급생계비	2020	2	0	0	1.4	0.8
	2019	2			0.6	
장수사진촬영	2020	2	5	△71.4	1.4	△0.6
	2019	7			2.0	
기타(나눔, 장터, 등)	2020	4	11	△73.3	2.8	△3.0
	2019	15			4.4	

□ 동 협의체 사업을 연간 화폐가치로 재산정하면 '19년 기준 약559,859,410원으로 나타났으며 '20년 기준 232,414,800원으로 나타남

- 동 협의체 사업은 공동모금회와 함께 기부금품을 직접적으로 접수하거나 1:1 결연 사업을 시행하는 자원모집 활동이 있음
- 이외에도 각 동 협의체를 통해서 자원이 공유되고 전달되는 특화사업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19년 기준 약 5.6억원 수준임
 - 특화사업의 화폐가치 산출은 1차적으로 각 동에서 해당 사업의 화폐가치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미기재되었거나 과도하게 기재된 사업들은 선별하여 재기재하였음
 - 재기재한 방법은 여러 동에서 동일유형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평균 화폐가치를 도출하여 미기재된 사업에 기입함
 - 또한 소수의 사업(미용서비스, 사진촬영, 세탁 등)의 사업은 해당 사업 내용을 시장가격의 중위수를 기입
 - 가령, 미용서비스의 경우 협의체 위원이나 지역 내 재능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컷트비용 약1만원(1회)으로 산출하여 재기입
 - 특화사업의 연간화폐가치는 '19년 기준 1개 동에서 평균 12,724천원의 화폐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화사업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의 누적 참여 수는 '19년 기준 약 5,461명이 참여하여 지원건수는 31,555건으로 나타남
 - 이는 '19년 기준 44개 동 협의체 위원들이 1개 동에서 평균 124명이 누적 활동한 것이며 평균 717건의 지원한 결과임
 - '19년 기준 사업수행 횟수는 1,685건으로 1개 동에서 1년 동안 약 38.3회의 특화사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화사업에 사업을 통해 지원한 대상은 '19년 기준 약 9,028명으로 1개 동 평균 약 205명에게 특화사업이 지원됨
 - 특화사업의 대상의 경우 동일한 사업이 시기와 계절을 달리하여 복수로 지원이 가능함으로 대상인원과 누적지원건수가 중복이 있음

- 가령 서비스 제공이나 식료품 전달 등의 사업은 생활용품 나눔과는 달리 정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1명의 대상에게 다회 차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

〈표 Ⅲ-7〉 2019-2020년 동협의체 사업운영의 화폐가치

구분	대상인원(명)		사업수행 횟수		협의체 위원 참여 수		지원건수		연간 화폐가치(원)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연도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현황	9,028	3,096	1,685	920	5,461	2,746	31,555	17,414	559,859,410	232,414,800
변화 정도	-5,932		-765		-2,715		-14,141		-327,444,610	

3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문조사 결과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현황

(1) 개요

□ 활동 현황 조사 및 분석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대상: 수원시 내 44개동 위원 및 위원장, 447명 전수
- 조사방법: 구조화된 엑셀조사지를 이용하여 44개동 단위 기입식 조사

○ 분석대상: 수원시 내 44개동 위원 및 위원장 447명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4개 동 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 특성

- 전체 응답자는 447명이며, 장안구에서 118명(26.4%), 권선구 123(27.5%), 팔달구 105명(23.5%), 영통구 101명(22.6%)이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89명(42.3%), 60대가 131명(29.3%), 40대 이하 104명(23.3%), 70대 이상이 23명(5.1%)순임
 - 성별은 여성이 313명(70.0%), 남성은 134명(30.0%), 직위 분포는 위원이 410명(91.7%), 위원장이 37명(8.3%)가 응답함
 - 소속은 주민이 대부분인 268명(60.0%), 복지시설 종사자는 132명(29.5%), 공무원 47명(10.5%)순으로 나타났으며,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2년 이하가 가장 많은 168명(37.6%), 다음은 4년 이상인 152명(34.0%), 2년 이상~4년 이하가 127명(28.4%) 순으로 나타남

〈표 Ⅲ-8〉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 수(명)		빈도(N)	비율(%)
합계		447	100.0
구	장안구	118	26.4
	권선구	123	27.5
	팔달구	105	23.5
	영통구	101	22.6
연령	40대 이하	104	23.3
	50대	189	42.3
	60대	131	29.3
	70대 이상	23	5.1
성별	남성	134	30.0
	여성	313	70.0
직위	위원	410	91.7
	위원장	37	8.3
소속 (참여자격)	공무원	47	10.5
	주민	268	60.0
	복지시설 종사자	132	29.5
협의체 위원 활동 기간	2년 이하	168	37.6
	2년 초과~4년 이하	127	28.4
	4년 초과	152	34.0

*전체 응답자 447명

**수원시 44개 동에서 모두 응답함

□ 타 사회단체 활동 현황

- 동 협의체 활동 이 외에 타 사회단체 활동 현황을 알아본 결과 통장협의회 72명, 주민자치회 55명, 적십자봉사회 13명, 마을만들기협의회 11명,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문고에 각각 10명씩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로 응답한 59명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시민단체, 구 발전연대, 의용소방대, 골

목상권 상인, 해당 동 지킴이봉사단, 이외 개인 봉사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표 Ⅲ-9〉 협의체 활동 외 타 사회단체 활동 현황(중복응답)

구분	빈도(N)	유효비율(%)
통장협의회	71	14.6
주민자치회	55	11.3
적십자봉사회	13	2.7
마을만들기협의회	11	2.3
새마을부녀회	10	2.1
새마을문고	10	2.1
방법기동순찰대	6	1.2
생활안전협의회	4	0.8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5	1.0
새마을협의회	3	0.6
자율방범대	3	0.6
방위협의회	3	0.6
노인회	2	0.4
자유총연맹	0	0.0
기타	59	12.1
해당없음	232	47.6
계	487	100

*중복응답 문항

□ 동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계기

- 동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계기는 ‘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위원장의 권유’가 126명(28.2%), ‘동장 등 공무원의 권유’ 120명(26.8%), ‘협의체 위원의 활동 현장을 목격하고 함께 참여하고 싶어 지원’ 108명(24.2%), ‘동 행정복지센터 공개모집 홍보물을 보고 지원’ 22명(4.9%) 순으로 나타남

- 기타 71명이 응답한 계기는 ‘당연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자진희망’, ‘지인 소개’ 등이 있었음

〈표 Ⅲ-10〉 동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계기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위원의 권유	126	28.2
동장 등 공무원의 권유	120	26.8
협의체 위원의 활동현장을 목격하고 함께 참여하고 싶어 지원	108	24.2
동 행정복지센터 공개모집 홍보물을 보고 지원	22	4.9
기타	71	15.9
계	447	100.0

□ 동 협의체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 동 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아본 결과, ‘관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전체 응답자 중 72.9%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주민이 동 행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가교역할’ 51명(11.4%),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역할’ 37명(8.3%), ‘사회공헌을 위한 봉사단체’ 33명(7.4%) 순으로 알 수 있음

〈표 Ⅲ-11〉 동 협의체가 해야하는 역할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관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	326	72.9
주민이 동 행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가교역할	51	11.4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역할	37	8.3
사회공헌을 위한 봉사단체	33	7.4
계	447	100.0

□ 동 협의체 활동하며 가장 보람있고 즐거웠던 사업

- 동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보람있었던 사업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가구방문’이 310명,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모니터링 지원사업’ 204명, ‘주거환경 보수 등 주거복지지원’, ‘음식나눔’, ‘1회성이지만 여러 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이 각각 138명으 응답함
- 이 외에도 ‘후원개발’, ‘거리홍보 등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재능기부’도 114명, 95명, 67명이 응답한 것으로 알 수 있음

〈표 Ⅲ-12〉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사업 유형(중복응답)

구분	빈도(N)	유효비율(%)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가구방문 ex) 가구방문, 취약계층 일제조사 등	310	23.1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모니터링 지원사업 ex) 1:1 안부확인 결연, 아쿠르트 배달, 말벗	204	15.2
주거환경 보수 등 주거복지지원 ex) 집수리, 청소, 도배장판	138	10.3
음식나눔 ex) 정기적 밑반찬, 식사 대접	138	10.3
1회성이지만 여러 위원이 참여하는 사업 ex) 김장김치, 복달임, 어르신 생일상	136	10.3
후원개발, 자원공유 ex) 공유냉장고, 후원처 헌판부착 후원의 밤, 축제참여	114	8.5
거리홍보 등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ex) 길거리 홍보, 장터 홍보	95	7.1
재능기부 ex) 미용서비스, 요리교실, 공예, 반려식물가꾸기	67	5.0
선풍기, 마스크, 방역소독, 빨래 등 생활지원	57	4.3
장학사업 ex) 취약아동청소년 대상 장학금, 용돈	45	3.3
나들이 등 여가지원	19	1.4
1:1 결연후원 사업	18	1.2
계	1,341	100

*중복응답 문항

□ 동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 동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191명(42.7%),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90명(42.5%)로 나타남
- 만족도에 대한 평균은 4.24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Ⅲ-13〉 동 협의체 위원 활동 만족도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평균(점)
매우 불만족	7	1.6	4.24
불만족	3	0.7	
보통	56	12.5	
만족	191	42.7	
매우 만족	190	42.5	
전체	447	100	

□ 동 협의체 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

- 동 협의체 위원 활동 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한 10명을 대상으로 불만족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참여수당, 실비지원 미흡’, ‘사업목적에 동의가 안되서’가 각각 3명, ‘행정복지센터와 성향이 맞지 않아서’가 2명으로 나타남

〈표 Ⅲ-14〉 동 협의체 활동하며 불만족하는 이유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참여수당, 실비지원 미흡	3	30.0
사업목적에 동의가 안되서	3	30.0
행정복지센터와 성향이 맞지 않아서	2	20.0
모임(회의)횟수가 많아서	1	10.0
위원 간 불화 및 갈등	1	10.0
전체	10	100.0

* 동 협의체 활동에 불만족~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10명임.

□ 동 협의체에 활동하며 만족하는 이유

- 동 협의체 위원 활동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203명(53.3%), ‘우리 동의 발전에 기여해서’ 159명(41.7%), ‘위원들 간 활동이 재미있어서’ 19명(5.0%) 순으로 나타남

〈표 Ⅲ-15〉 동 협의체 활동하며 만족하는 이유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203	53,3
우리 동의 발전에 기여해서	159	41,7
위원들 간 활동이 재미있어서	19	5,0
전체	381	100,0

*매우 불만족~보통이라고 응답한 66명 제외한 응답자 수임.

□ 월 정례적 회의 시 추진사업에 대해 의견 논의에 대한 적절성

- 월 정례적 회의 시 추진사업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그렇다’ 224명(50.1%), ‘매우 그렇다’ 126명(28.2%)로 나타남
- 평균점수는 4.02점으로 다소 높은 편임

〈표 Ⅲ-16〉 회의 시 사업에 대한 의견 논의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평균(점)
전혀 그렇지 않다	4	0,9	4,02
그렇지 않다	12	2,7	
보통이다	81	18,1	
그렇다	224	50,1	
매우 그렇다	126	28,2	
전체	447	100	

□ 현재 살고 있는 동 지역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인식

- 현재 살고 있는 동 지역의 문제나 이슈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04명(45.6%), ‘잘 안다’ 175명(39.1%), 다음으로 ‘매우 잘 안다’는 55명(12.3%)로 나타남
- 평균점수는 3.6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표 Ⅲ-17〉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나 이슈 인식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평균(점)
전혀 모른다	1	0.2	3.61
모른다	12	2.7	
보통이다	204	45.6	
잘 안다	175	39.1	
매우 잘 안다	55	12.3	
전체	447	100	

□ 현재 살고 있는 동에 대한 인식

- 위원들이 현재 살고 있는 동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본 결과, ‘우리 동에는 주민 끼리 협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가 3.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우리 동의 각 사회단체들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3.92점, ‘우리 동의 각 사회단체들은 각 단체 간 연합행사 등 연계·협력을 하고 있다’가 3.89점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동에 대한 인식정도의 평균은 3.82점임

〈표 Ⅲ-18〉 동에 관한 인식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
우리 동(洞)의 주민들은 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0.2)	27 (6.0)	160 (35.8)	183 (40.9)	76 (17.0)	3.68
우리 동(洞)은 상부상조의 정신이 상당히 남아있다.	2 (0.4)	21 (4.7)	140 (31.3)	207 (46.3)	77 (17.2)	3.75
우리 동(洞)주민들은 평소 주변 이웃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2 (0.4)	19 (4.3)	149 (33.3)	214 (47.9)	63 (14.1)	3.71
우리 동(洞)에는 주민끼리 협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2 (0.4)	6 (1.3)	87 (19.5)	267 (59.7)	85 (19.0)	3.96
우리 동(洞)주민은 축제, 장터 등 공동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0.7)	12 (2.7)	124 (27.7)	229 (51.2)	79 (17.7)	3.83
우리 동(洞)의 각 사회단체들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3 (0.7)	9 (2.0)	105 (23.5)	232 (51.9)	98 (21.9)	3.92
우리 동(洞)의 각 사회단체들은 각 단체 간 연합행사 등 연계/협력을 하고 있다.	2 (0.4)	13 (2.9)	102 (22.8)	243 (54.4)	87 (19.5)	3.89
전체 평균						3.82

□ 4개 구별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을 4개 구별 평균을 살펴보면, 수원시 전체 평균은 3.82점, 팔달구가 가장 높은 3.88점, 장안구 3.84점, 권선구 3.83점, 영통구 3.73점으로 나타남
-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을 수원시 4개 구별로 나눠서 알아본 결과, ‘우리 동의 주민들은 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의 질문에 팔달구가 가장 높은 3.75점, 장안구 3.72점, 권선구 3.67점, 영통구 3.59점 순으로 나타남
- ‘우리 동은 상부상조의 정신이 상당히 남아있다.’의 질문에 팔달구 3.80점, 권선구 3.76점, 장안구 3.75점, 영통구 3.68점으로 나타남
- ‘우리 동 주민들은 평소 주변 이웃들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팔달구 3.82점, 권선구 3.72점, 장안구 3.67점, 영통구 3.62점으로 위의 질문과 동일한 순으로 알 수 있음.

- 다음 ‘우리 동에는 주민끼리 협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에 대한 질문은 다른 질문보다 다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임
 - 권선구가 4.00점, 팔달구, 장안구가 동일하게 3.97점, 영통구가 3.87점임
- ‘우리 동 주민은 축제, 장터 등 공동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의 질문에는 이번에도 팔달구가 가장 높은 3.96점, 장안구 3.83점, 권선구 3.82점, 영통구 3.68점으로 영통구가 다른 구 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알 수 있음
 - ‘우리 동의 각 사회단체들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장안구 3.99점, 팔달구 3.92점, 권선구 3.90점, 영통구 3.87점임. ‘우리 동의 각 사회단체들은 각 단체 간 연합행사 등 연계·협력을 하고 있다.’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동일하게 3.93점, 팔달구 3.91점, 영통구가 3.79점으로 나타남

〈표 Ⅲ-19〉 4개 구별 동 협의체 위원의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수원시 전체 평균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1	우리 동(洞)의 주민들은 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68	3.72	3.67	3.75	3.59
2	우리 동(洞)은 상부상조의 정신이 상당히 남아있다.	3.75	3.75	3.76	3.80	3.68
3	우리 동(洞)주민들은 평소 주변 이웃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3.71	3.67	3.72	3.82	3.62
4	우리 동(洞)에는 주민끼리 협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3.96	3.97	4.00	3.97	3.87
5	우리 동(洞)주민은 축제, 장터 등 공동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83	3.83	3.82	3.96	3.68
6	우리 동(洞)의 각 사회단체들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3.92	3.99	3.90	3.92	3.87
7	우리 동(洞)의 각 사회단체들은 각 단체 간 연합행사 등 연계/협력을 하고 있다.	3.89	3.93	3.93	3.91	3.79
전체 평균		3.82	3.84	3.83	3.88	3.73

*5점 만점 척도

□ 참여자격에 따른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Ⅳ-17〉과 같음
- 수원시 전체 평균은 3.82점, 복지시설 종사자 3.90점, 공무원 3.81점, 주민 3.79점으로 나타남

- ‘우리 동의 주민들은 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복지시설 종사자가 3.79점, 공무원 3.74점, 주민 3.62점, ‘우리 동은 상부상조의 정신이 상당히 남아있다’에 대한 질문도 복지시설 종사자, 주민, 공무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우리 동 주민들은 평소 주변 이웃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복지시설 종사자 3.73점, 주민 3.72점, 공무원 3.62점으로 다소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우리 동에는 주민끼리 협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는 복지시설 종사자가 4.04점으로 수원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음
 - 복지시설 종사자 4.04점, 주민 3.93점, 공무원 3.89점으로 나타남
 - 다음 ‘우리 동 주민은 축제, 장터 등 공동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질문에 복지시설 종사자 3.88점, 주민 3.82점, 공무원 3.72점 순임
-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질문은 ‘우리 동의 각 사회단체들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로서 복지시설 종사자 4.04점, 공무원 3.92점, 주민 3.88점
 - ‘우리 동의 각 사회단체들은 각 단체 간 연합행사 등 연계·협력을 하고 있다’의 질문에 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이 동일한 점수인 3.94점, 주민 3.87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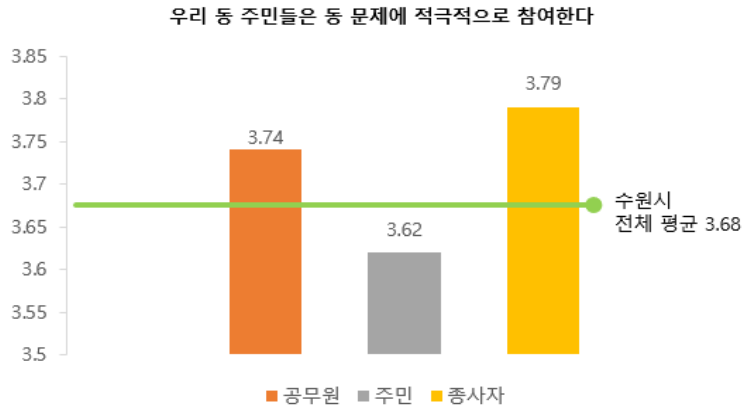
〈표 Ⅲ-20〉 참여자격에 따른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수원시 전체 평균	공무원	주민	복지시설 종사자
1	우리 동(洞)의 주민들은 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68	3.74	3.62	3.79
2	우리 동(洞)은 상부상조의 정신이 상당히 남아있다.	3.75	3.81	3.67	3.90
3	우리 동(洞)주민들은 평소 주변 이웃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3.71	3.62	3.72	3.73
4	우리 동(洞)에는 주민끼리 협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3.96	3.89	3.93	4.04
5	우리 동(洞)주민은 축제, 장터 등 공동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83	3.72	3.82	3.88
6	우리 동(洞)의 각 사회단체들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3.92	3.92	3.88	4.02
7	우리 동(洞)의 각 사회단체들은 각 단체 간 연합행사 등 연계/협력을 하고 있다.	3.89	3.94	3.87	3.94
전체 평균		3.82	3.81	3.79	3.90

*5점 만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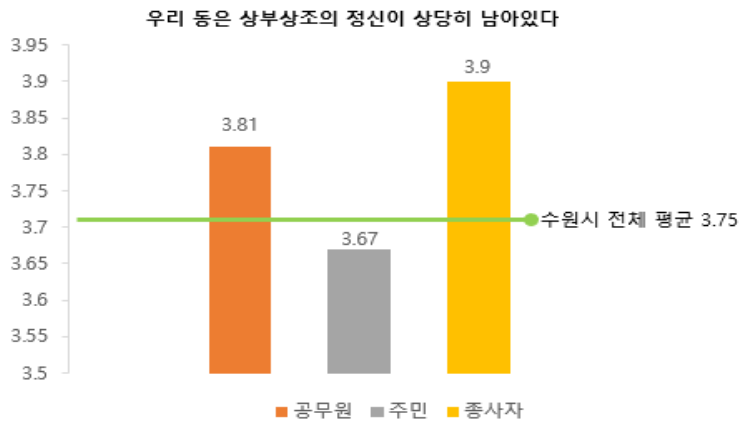
- 참여자격에 따른 ‘우리 동의 주민들은 동(洞)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인식에 공무원 3.74점, 주민 3.62점, 복지시설 종사자는 3.79점으로 나타남

〈그림 Ⅲ-2〉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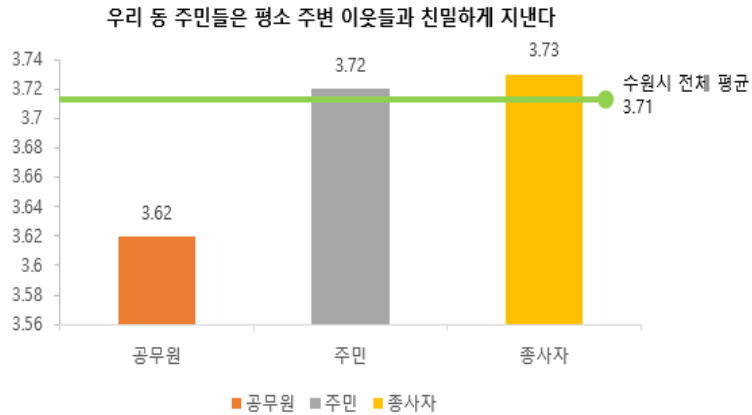
- 참여자격에 따른 ‘우리 동은 상부상조의 정신이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인식에 공무원 3.81점, 주민 3.67점, 복지시설 종사자는 3.90점으로 나타남

〈그림 Ⅲ-3〉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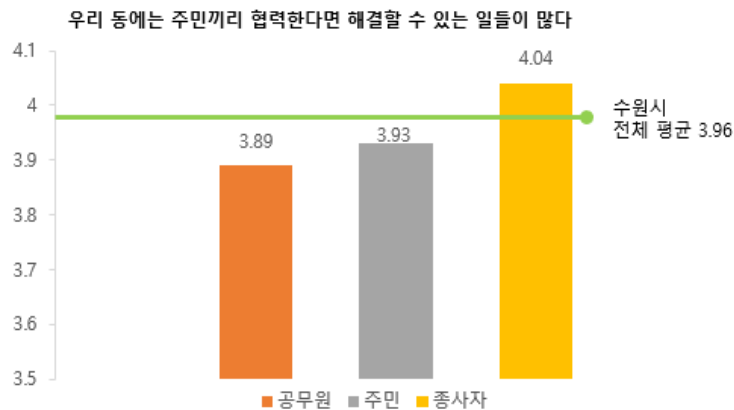
- 참여자격에 따른 ‘우리 동 주민들은 평소 주변 이웃들과 친밀하게 지낸다’라는 인식에 공무원 3.62점, 주민 3.72점, 복지시설 종사자는 3.73점으로 나타남

〈그림 Ⅲ-4〉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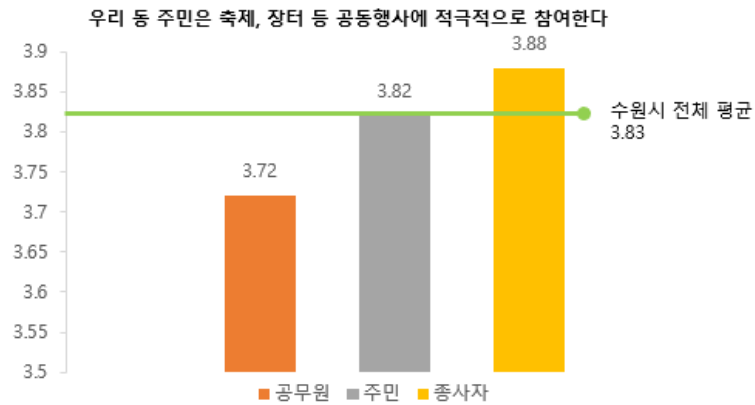
- 참여자격에 따른 ‘우리 동 주민들은 평소 주변 이웃들과 친밀하게 지낸다’라는 인식에 공무원 3.89점, 주민 3.93점, 복지시설 종사자는 4.04점으로 나타남

〈그림 Ⅲ-5〉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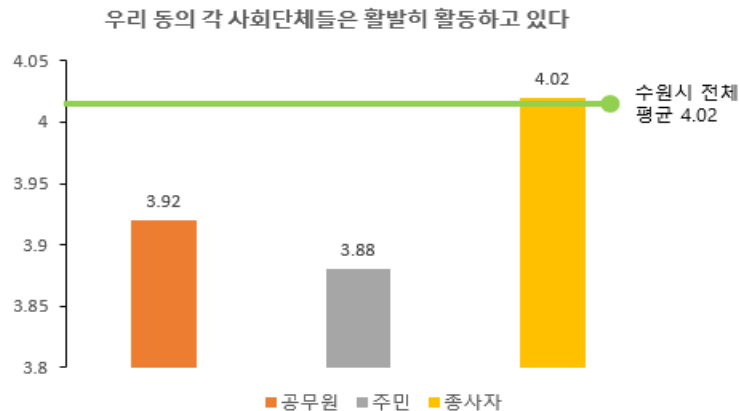
- 참여자격에 따른 ‘우리 동 주민은 축제, 장터 등 공동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인식에 공무원 3.72점, 주민 3.82점, 복지시설 종사자는 3.88점으로 나타남

〈그림 Ⅲ-6〉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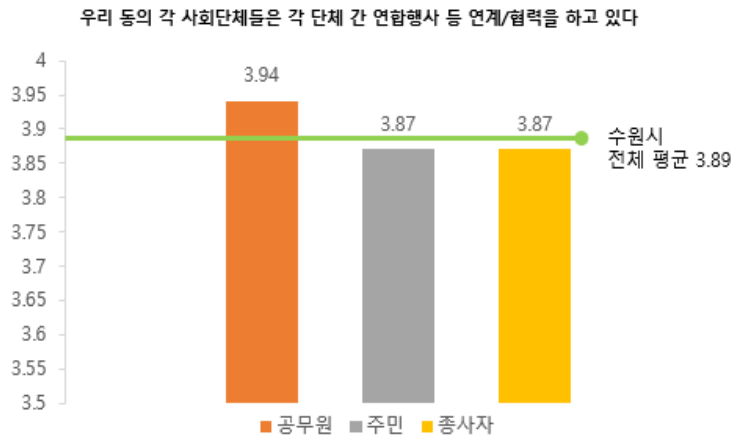
- 참여자격에 따른 ‘우리 동의 각 사회단체들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인식에 복지시설 종사자가 4.02점, 공무원은 3.92점, 주민은 3.88점으로 나타남

〈그림 Ⅲ-7〉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⑥



- 참여자격에 따른 ‘우리 동의 각 사회단체들은 각 단체 간 연합행사 등 연계/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에 공무원 3.94점, 주민, 종사자 각각 3.87점으로 알 수 있음

〈그림 Ⅲ-8〉 참여자격에 따른 동에 대한 인식-⑦



□ 현재 살고 있는 동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

- 현재 살고 있는 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은 ‘문화센터’ 201명, ‘북카페 등 여가 시설’ 192명, ‘주민사용 다목적 강당, 교실’이 18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타에 응답한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를 다수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지역아동 센터, 노인복지관으로 나타남
- 공간으로는 공원, 주차장, 여성안심 귀가길로도 응답함

〈표 Ⅲ-21〉 현재 살고 있는 동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문화센터	201	15.0
북카페 등 여가시설	192	14.3
주민사용 다목적 강당, 교실	184	13.7
기부활성화 나눔공간 (예: 물품 나눔공간, 공유냉장고 등)	180	13.4
스포츠센터	164	12.2
보건의료 관련 시설	151	11.3
노인 요양, 재가, 여가시설	145	10.8
도서관	57	4.3
어린이집	49	3.7
기타	18	1.3
계	1,341	100

*중복응답 문항

□ 현재 살고 있는 동에서 예산 결정 자율성 확보 시 가장 하고 싶은 일

- 첫 번째가 ‘불우이웃돕기’, 다음으로 ‘노인복지 서비스와 시설 개선’, ‘주거환경 개선’ 순으로 나타남
- ‘거리청소 및 분리수거함 설치’가 136명, ‘도서관, 문화시설 확충’이 105명, ‘도로, 인도 정비, 마을가꾸기’가 103명 순으로 나타남

〈표 Ⅲ-22〉 예산 결정 자율성 확보 시 가장 하고 싶은 일(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불우이웃돕기	211	16.6
노인복지 서비스와 시설 개선	174	13.7
주거환경개선	149	11.7
거리청소 및 분리수거함 설치	136	10.7
도서관, 문화시설 확충	105	8.3
도로, 인도 정비, 마을가꾸기	103	8.1
치안, 안전문제 개선	90	7.1
영유아시설 확충	88	6.9
노후주택 개·보수	80	6.3
보건소, 공공보건 환경 개선	72	5.7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개선	62	4.9
계	1,270	100

*중복응답 문항

□ 현재 살고 있는 동이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

- 현재 살고 있는 동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마을재난안전’이 가장 높은 3.50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3.40점, ‘마을복지 공동체’가 3.34점으로 알 수 있음

〈표 Ⅲ-23〉 현재 살고 있는 동이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

구분	세부사항	평균
마을재난안전	동(洞)의 생활안전 강화 ex) 범죄예방, 교통안전, 재난·재해대비	3.50
마을복지 공동체	동(洞) 내 환경가꾸기 ex) 봉사활동, 마을벽화, 경로당	3.34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방문형 복지서비스 ex) 방문건강관리, 안부확인, 식사배달	3.40
마을평생교육	동(洞)의 수요,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ex) 평생학습 프로그램	3.27
마을자원개발	동(洞)의 명소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ex) 마을축제, 마을장터, 마을문화관광	3.23
주민의식교육	동(洞)의 주민리더들의 활동촉진교육 ex) 정책변화,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3.32
전체 평균		3.34

*4점 만점 척도

□ 동 협의체 참여자격에 따른 동 발전에 대한 인식

- 현재 살고 있는 동이 발전하기 위한 사항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마을재난안전(동의 생활안전 강화)로 3.50점이며, 다음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3.40점, 마을복지공동체 3.34점으로 나타남
- 참여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공무원이, 주민, 복지시설 종사자 모두가 마을재난안전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 마을복지공동체는 복지시설 종사자, 주민이 비슷한 경향을 보인 3.37점, 3.34점, 공무원은 3.26점으로 알 수 있음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복지시설 종사자가 3.50점, 주민 3.37점, 공무원 3.26점, 마을평생교육과 마을자원개발은 복지시설 종사자, 주민이 동일하게 각각 3.30점, 3.26점, 공무원은 3.06점, 3.00점임
- 마지막으로 주민의식교육은 복지시설 종사자, 주민이 각각 3.34점, 공무원 3.15점으로 나타남

○ 참여자격에 따라 알아본 결과 평균적으로 복지시설 종사자가 3.39점으로 나타나 동이 발전하기 위한 사항으로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 수 있음

〈표 Ⅲ-24〉 동 협의체 참여자격에 따른 동 발전에 대한 인식

구분	세부사항	평균	공무원	주민	종사자
마을재난안전	동(洞)의 생활안전 강화 ex) 범죄예방, 교통안전, 재난·재해대비	3.50	3.32	3.51	3.55
마을복지 공동체	동(洞) 내 환경가꾸기 ex) 봉사활동, 마을벽화, 경로당	3.34	3.26	3.34	3.37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방문형 복지서비스 ex) 방문건강관리, 안부확인, 식사배달	3.40	3.26	3.37	3.50
마을평생교육	동(洞)의 수요,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ex) 평생학습 프로그램	3.27	3.06	3.30	3.30
마을자원개발	동(洞)의 명소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ex) 마을축제, 마을장터, 마을문화관광	3.23	3.00	3.26	3.26
주민의식교육	동(洞)의 주민리더들의 활동촉진교육 ex) 정책변화,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3.32	3.15	3.34	3.34
전체 평균		3.34	3.18	3.35	3.39

*4점 만점 척도

□ 동 협의체가 현재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동 협의체가 현재보다 더 활성화 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 개발 확대’가 134명,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지원’ 130명, ‘위원 대상 지속적인 리더역량 교육’이 10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5〉 동 협의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여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개발 확대	134	30.0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지원	130	29.1
위원 대상 지속적인 리더역량 교육	103	23.0
회의참여수당 등 지원범위 확대	70	15.7
협의체 위원 수의 확대	10	2.2
전체	447	100.0

□ 참여자격에 따른 협의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참여자격에 따른 협의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위원 대상 지속적인 리더 역량 교육’이 18명(38.3%), ‘여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개발 확대’ 11명(23.4%), ‘회의참여수당 등 지원범위 확대’,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지원’이 각각 9명(19.1%)로 나타남
- 주민은 ‘여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개발 확대’가 가장 많은 84명(31.3%), 다음으로는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예산 지원’ 76명(28.4%), ‘위원 대상 지속적인 리더 역량 교육’ 64명(23.9%), ‘회의참여수당 등 지원범위 확대’가 37명, ‘협의체 위원 수의 확대’가 7명으로 나타남
- 복지시설 종사자는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지원’이 가장 많은 45명(34.1%), ‘여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개발 확대’ 39명(29.5%), ‘회의 참여수당 등 지원범위 확대’는 24명(18.2%), ‘위원 대상 지속적인 리더 역량 교육’ 21명(15.9%), ‘협의체 위원 수의 확대’ 3명(2.3%) 순으로 나타남

〈표 Ⅲ-26〉 참여자격에 따른 협의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구분	위원 대상 지속적인 리더역량교육	회의참여수당 지원범위 확대	여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개발 확대	복지사업 수행 위한 사업예산지원	협의체위원 수 확대	전체
공무원	18 (38.3%)	9 (19.1%)	11 (23.4%)	9 (19.1%)	0 (0.0%)	47 (100.0%)
주민	64 (23.9%)	37 (13.8%)	84 (31.3%)	76 (28.4%)	7 (2.6%)	268 (100.0%)
복지시설 종사자	21 (15.9%)	24 (18.2%)	39 (29.5%)	45 (34.1%)	3 (2.3%)	132 (100.0%)
전체	103 (23.0%)	70 (15.7%)	134 (30.0%)	130 (29.1%)	10 (2.2%)	447 (100.0%)

□ 향후 동 협의체 위원의 선정 시 가장 바람직한 방식

- 향후에 동 협의체 위원을 선정할 시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한 비중을 늘려야 함’ 182명(40.7%), ‘협의체 민간위원의 권유와 추천을 통한 모집 비중을 늘려야함’ 175명(39.1%)로 나타남
- 기타 답변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경험이 있는 위원 추천’과 ‘추천, 공개 모집 병행’이라고 응답함

〈표 Ⅲ-27〉 동 협의체 위원 선정 시 가장 바람직한 방식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공개모집을 통한 비중을 늘려야 함	182	40.7
협의체 민간위원의 권유와 추천을 통한 모집 비중을 늘려야 함	175	39.1
동장 및 팀장의 추천 및 권유에 의한 모집 비중을 늘려야 함	43	9.6
기관 및 단체의 당연직 비중을 늘려야함	37	8.3
기타	10	2.2
전체	447	100.0

□ 참여자격에 따른 협의체 위원 선정 시 가장 바람직한 사항

- 참여자격에 따른 협의체 위원 선정 시 가장 바람직한 사항을 알아본 결과, 공무원은 ‘협의체 민간위원 권유와 추천’이 21명(44.7%), ‘공개모집을 통한 비중을 늘려야 함’ 13명(27.7%), ‘동장 및 팀장 추천, 권유(섭외)’가 6명(12.8%) 순으로 나타남
- 주민은 ‘공개모집을 통한 비중을 늘려야함’ 113명(42.2%), ‘협의체 민간위원 권유와 추천’이 109명(40.7%), ‘동장 및 팀장 추천, 권유(섭외)’가 27명(10.1%)으로 알 수 있음
- 복지시설 종사자는 ‘공개모집을 통한 비중을 늘려야 함’ 56명(42.4%), ‘협의체 민간위원 권유와 추천’이 45명(34.1%), ‘기관 및 단체의 당연직 비중’ 15명(11.4%)순으로 나타남

〈표 Ⅲ-28〉 참여자격에 따른 협의체 위원 선정 시 가장 바람직한 사항

구분	공개모집을 통한 비중 늘려야함	동장 및 팀장 추천, 권유(섭외)	협의체 민간위원 권유와 추천	기관 및 단체의 당연직 비중	기타	전체
공무원	13 (27.7%)	6 (12.8%)	21 (44.7%)	5 (10.6%)	2 (4.3%)	47 (100.0%)
주민	113 (42.2%)	27 (10.1%)	109 (40.7%)	17 (6.3%)	2 (0.7%)	268 (100.0%)
복지시설 종사자	56 (42.4%)	10 (7.6%)	45 (34.1%)	15 (11.4%)	6 (4.5%)	132 (100.0%)
전체	182 (40.7%)	43 (9.6%)	175 (39.1%)	37 (8.3%)	10 (2.2%)	447 (100.0%)

□ 동 협의체 활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항

- ‘사업예산 부족’ 154명(34.5%), ‘실질 경비(수당)지원 부족’ 92명(20.6%), ‘협소한 사업 범위’ 88명(19.7%) 순으로 나타남
- 동 협의체 활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유 중 기타 답변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방해가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다수였고, 각자 현업이 있어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음

〈표 Ⅲ-29〉 동 협의체 활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유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사업예산 부족	154	34.5
실질 경비(수당)지원 부족	92	20.6
협소한 사업 범위	88	19.7
협의체 위원들 간 관계	48	10.7
과도한 사업수행 및 참여 요구	36	8.1
기타	29	6.5
전체	447	100.0

□ 참여자격에 따른 동 협의체 활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항

- 참여자격에 따라 협의체 활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항을 살펴본 결과, 공무원은 ‘과도한 사업 수행 및 참여요구’가 14명(29.8%), ‘실질경비 지원 부족’이 9명(19.1%), ‘사업예산 부족’, ‘협소한 사업범위’가 각각 8명으로 나타남
- 주민이 응답한 협의체 활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항으로는 ‘사업예산 부족’이 100명(37.3%), 다음으로 ‘실질 경비 지원 부족’이 55명(20.5%), ‘협소한 사업범위’가 52명(19.4%) 순으로 나타남
- 복지시설 종사자 역시 ‘사업예산 부족’이 46명(34.8%), ‘실질경비 지원 부족’, ‘협소한 사업범위’가 각각 28명(21.2%), 다음으로 ‘협의체 위원들 간의 관계’가 12명(9.1%)으로 알 수 있음

〈표 Ⅲ-30〉 참여자격에 따른 협의체 활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항

구분	협의체 위원들 간의 관계	실질 경비 지원 부족	과도한 사업 수행 및 참여 요구	사업예산 부족	협소한 사업범위	기타	전체
공무원	1 (2.1%)	9 (19.1%)	14 (29.8%)	8 (17.0%)	8 (17.0%)	7 (14.9%)	47 (100.0%)
주민	35 (13.1%)	55 (20.5%)	11 (4.1%)	100 (37.3%)	52 (19.4%)	15 (5.6%)	268 (100.0%)
복지시설 종사자	12 (9.1%)	28 (21.2%)	11 (8.3%)	46 (34.8%)	28 (21.2%)	7 (5.3%)	132 (100.0%)
전체	48 (10.7%)	92 (20.6%)	36 (8.1%)	154 (34.5%)	88 (19.7%)	29 (6.5%)	447 (100.0%)

□ 동 협의체 활동에 적당한 구성 인원

- 20명 이하가 223명(49.9%)이라고 절반이 응답하였고, 21~30명 이하가 184명(41.2%), 31~40명 이하가 28명(6.3%)로 나타남
- 위의 질문 중 동 협의체 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유 기타 답변 중,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음

〈표 Ⅲ-31〉 동 협의체 활동에 적당한 구성 인원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20명 이하	223	49.9
21~30명 이하	184	41.2
31~40명 이하	28	6.3
40명 이상	12	2.7
전체	447	100.0

□ 참여자격에 따른 동 협의체 활동에 적당한 구성 인원

- 참여자격에 따른 협의체 활동에 적당한 구성 인원을 살펴본 결과, 공무원, 주민, 복지시설 종사자가 대부분 '20명 이하'로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높은 인원 구성은 21명~30명 이하라고 응답함
- 그 외 40명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주민 10명(3.7%), 복지시설 종사자 2명(1.5%)도 있었음

〈표 Ⅲ-32〉 참여자격에 따른 동 협의체 활동에 적당한 구성 인원

구분	20명 이하	21명~30명 이하	31명~40명 이하	40명 이상	전체
공무원	28 (59.6%)	18 (38.3%)	1 (2.1%)	0 (0.0%)	47 (100.0%)
주민	124 (46.3%)	116 (43.3%)	18 (6.7%)	10 (3.7%)	268 (100.0%)
복지시설 종사자	71 (53.8%)	50 (37.9%)	9 (6.8%)	2 (1.5%)	132 (100.0%)
전체	223 (49.9%)	184 (41.2%)	28 (6.3%)	12 (2.7%)	447 (100.0%)

□ 주민자치회 인지 여부 및 운영방식

- 현재 시범사업 중이며, 향후 확대설치 계획인 주민자치회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 283명(63.3%), ‘모르고 있다’ 164명(36.7%)로 나타남
- 향후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경우 주민자치회와 동 협의체 간 운영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수 이상이 ‘동 협의체, 주민자치회가 각각 독립 운영되어야 한다’고 155명(34.7%)이 응답함
- 다음으로는 ‘동 협의체,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분과로 소속되어야 한다’가 102명(36.0%)로 나타남

〈표 Ⅲ-33〉 주민자치회 인지 여부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알고 있다	283	63.3
모르고 있다	164	36.7
전체	447	100.0

〈표 Ⅲ-34〉 주민자치회, 동 협의체 운영방식

구분	응답자 수(명)	유효비율(%)
동 협의체와 주민자치회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55	54.8
동 협의체가 주민자치회 내 하나의 분과로 소속되어야 한다	102	36.0
잘 모르겠다	26	9.2
전체	283	100.0

*주민자치회 인지 여부에 ‘모르고 있다’ 164명 제외한 질문임

□ 참여자격에 따른 주민자치회, 협의체 운영방식

- 참여자격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협의체 운영 방식을 알아본 결과, 공무원은 ‘동 협의체,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분과로 소속되어서 활동’이 20명(57.1%), ‘동 협의체, 주민자치회 각각 독립 운영’이 12명(34.3%)으로 나타남
- 반면 주민은 ‘동 협의체, 주민자치회가 각각 독립 운영’이 107명(60.1%), ‘동 협의체,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분과로 소속되어 활동’이 55명(30.9%)으로 나타남
- 복지시설 종사자 또한 ‘동 협의체, 주민자치회가 각각 독립 운영’이 36명(51.4%), ‘동 협의체,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분과로 소속되어 활동’이 27명(38.6%)으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음

〈표 Ⅲ-35〉 참여자격에 따른 주민자치회, 협의체 운영 방식

구분	동 협의체, 주민자치회 각각 독립 운영	동 협의체,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분과로 소속	잘 모르겠다	전체
공무원	12 (34.3%)	20 (57.1%)	3 (8.6%)	35 (100.0%)
주민	107 (60.1%)	55 (30.9%)	16 (9.0%)	178 (100.0%)
복지시설 종사자	36 (51.4%)	27 (38.6%)	7 (10.0%)	70 (100.0%)
전체	155 (54.8%)	102 (36.0%)	26 (9.2%)	283 (100.0%)

*주민자치회 인지여부 응답 문항 중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 283명임

Ⅳ.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조사 결과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조사 개요

□ 사례조사 목적

- 44개 동 협의체 중 비교적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7개 동 협의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활성화 요인을 도출

□ 사례조사 대상 지역(협의체) 선정

- 동 협의체 운영현황 조사(2021.7월 실시) 후 1차 대상 선별
 - “2019년, 2020년 동 협의체 사업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우수지역 선별
 - 1차 우수지역 선별 기준은 사업유지, 환경변화에 따라 신규사업을 통한 대응 정도를 중점적으로 판단
 - 2019~2020년 간 협의체 사업의 유지 비율이 높은 동(기존 사업의 70% 이상 유지한 동)
 - 2020년 협의체 신규 사업비율이 높은 동(2020년 사업 중 신규사업 비중이 20%이상 구성한 동)
 - 우수지역의 1차 선별은 총 28개 동을 선별
 - 사업유지비율이 높은 동: 9개 동
 - 신규사업 비율이 높은 동: 19개 동
-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최종 7개 대상지 선정
 - 1차 선정된 28개 동 외 수원시에서 별도로 추천 받은 지역(과거 협의체 평가 시 수상한 지역) 9개와 교차검토
 - 현황조사를 통한 28개 동과 수원시 추천 9개 동 중 상호 교차검토를 통해 12개 동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
 - 12개 대상 동 중 담당자 '19년~현재까지 담당자(팀장) 변동이 없는 동 최우선 고려하여 최종 7개 지역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

- 사례조사 대상 동(洞) 중 '21년 신규 인사발령으로 팀장/담당자 모두 변동된 경우 조사대상 제외
- 각동에 “보건복지팀”이 설치·운영 중인 동(洞)을 우선 선별도 검토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복지팀은 설치만 되었고 간호직은 모두 보건소 등으로 파견 간 상황임으로 조사대상에 고려할 수 없었음

〈표 IV-1〉 동 협의체 사례조사 대상

연번	사례조사 대상 동(洞)	사유
1	M동	- 타 동(洞)에 비해 '20년 사업이 활성화되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처 양호 지역 상권과 봉사단체 등과 협력 원할
2	S동	- '20년에는 '19년에 비해 사업이 증가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처 노력 후원, 결연, 위생(청소), 방문 등 다양한 형식의 협의체 사업 운영
3	D동	- 사업 내용이 창의적이며 사업 대상 또한 독거 중장년 등까지 포괄하는 노력 지역 주민의 자원 연계 및 활용에 우수
4	Y동	-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동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의 운영사례 파악에 참조 각 사업의 연간 지원건수가 높은 수준임(2개 사업 343건) '00다솜'이라는 협의체 활동의 정책브랜드 형성
5	H동	- 사업수행횟수와 참여인원이 높음 주민/지역상가 대상 홍보활동 등 사각지대 발굴과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6	C동	사업별 적극적 홍보와 참여 수준이 높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중
7	J동	- 사업수행 실적이 높음 - 아파트 지역과 주택 밀집 지역이 공존하는 지역

□ 사례조사 방법

○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 “2019년, 2020년 동 협의체 사업현황 조사” 결과 검토
- 해당 동 기본 일반현황 사항 및 협의체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등 사전 검토

○ FGI 추진

- 사전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FGI 수행
- FGI 대상: 각 동 협의체 담당 팀장, 주무관, 협의체 민간위원장

〈표 IV-2〉 동 협의체 FGI 참여자

연번	대상 동(洞)	참여자
1	M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팀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주무관 1명
2	S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팀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주무관 1명
3	D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팀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주무관 1명
4	Y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팀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주무관 1명
5	H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팀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주무관 1명
6	C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팀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주무관 1명
7	J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팀장 1명 - 행정복지센터 협의체 담당 주무관 1명
합계		총 21명

○ 주요 FGI 내용

-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핵심주제를 “대분류-중분류-주요질문”으로 구성하여 공무원과 민간위원장 함께 자연스럽게 해당 주제범주에 대해 논의하면서 진행
- 공무원용 질문과 민간위원장의 질문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나 FGI 시 순서를 정하고 진행하지는 않음

〈표 IV-3〉 FGI 공무원용 질의항목

대분류	중분류	주요 질문
참여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홍보 및 모집	협의체 위원 구성 시 홍보와 모집 방법 등은? 위원 구성 이후 사업의 홍보 노력
	주민조직화 교육	주민의 조직화를 위해서 별도로 수행하는 동의 노력이 있는지?
	공동체활동 (조성/혹은 강화)	주민의 공동체성 혹은 유대감 조성 등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사업 내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있는지
	대상자/주민 등을 대하는 교육	협의체 위원이 여러 주민과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교육(상담, 인원 등)에 대한 간략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지
	지역 내 복지의제 혹은 사업개발	협의체 내 사업개발 및 아이디어 제공은 주로 누가?
주민주도 복지의제 발굴 및 실행	복지의제 선정	협의체 내 사업기획, 혹은 운영을 위한 복지의제(안) 제시는 주로 민 간과 공공 중 어느 비중이 높은가?
	계획수립	사업계획 수립은?
	사업평가	자체 동별로 당해연도 사업평가나 모니터링하는 시간이 있는지
복지기관/정부 간 연계	복지기관과 관계성	협의체와 지역 내 복지기관과 연계사업 등이 있는지
	행정복지센터와 관계성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체 간 관계성
주민 조직 간 협력 강화	주민자치위원회/주민 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자치회 등과의 관계성은
	직능단체/유관단체	관내 사회단체와 협의체 간 관계 및 교류 정도
	이동장/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	이동장과 관계성, 사업연계성, 등의 사례가 있는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협의체 위원 간 중복성 여부 등
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	협의체 자체 자원	협의체 위원의 후원, 참여 등으로 구성하는게 좋은지 혹은 협의체 외 외부 자원을 협의체를 통해 발굴하여 연계하는 것에 노력하는지 등

〈표 IV-4〉 FGI 민간위원장용 질의항목

대분류	중분류	주요 질문
협의체 참여의 활성화 노력	업무연락	협의체 모임, 향후 혹은 다음 회차 모임의 결정 및 논의는 누가 주도하나? 일정수립 후 업무연락 등은 주로 공무원이 하나?
	상호 소통	행정복지센터에서 온 업무연락 외 협의체 위원 간 참여 독려, 안부확인 등의 방법이 있나?
	친밀감 조성	협의체 위원 간 친밀도 향상을 위해 하는 별도의 노력이 있는지
	동의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벤치마킹, 워크숍 등에 참여도가 좋은가
	공유	협의체 위원 간 주변에 어려운 이웃, 사각지대 등의 내용과 정보를 상시 적으로 발굴 및 공유하는가
협의체 활동에 대한 소회	가장 자긍심이 높은 사례	협의체 활동하면 언제가 가장 보람있다고 생각되는지 혹은 어떤 사업이나 활동 후 가장 보람있었다고 생각되었는지
	가장 힘들 사례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는지 협의체 위원들이 주로 힘들어하는 활동은 무엇인지(회의, 활동, 기획 등)
	주민들과의 소통	협의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민과 활동 이후 소통 등이 있는지 협의체 활동(사업)의 대상 발굴/선정의 비중은 공공과 협의체위원 중 어 디가 더 큰가
협의체의 이상형(ideal type)	좋은 협의체 형태	협의체 활동하면서 그리는 좋은 협의체 모습이란?(가령, 협의체 위원 간 친목 혹은 봉사단체처럼 활동, 또는 사업(일, 기능) 중심적 활동 등)
	주민참여	협의체 활동의 바람직한 모습은 “주민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아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 중 어디가 더 중요
주민 조직 간 협력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자치회 등과의 관계성은
	직능단체/유관단체	관내 사회단체와 협의체 간 관계 및 교류 정도
	이통장/명예사회복 지공무원 등 관계	이통장과 관계성
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	협의체 자체 자원	협의체 위원의 후원, 참여 등으로 구성하는게 좋은지 혹은 협의체 외 외부 자원을 협의체를 통해 발굴하여 연계하는 것에 노 력하는지 등

□ FGI 분석 과정

- 참석자 사전 동의 후 녹음을 하였으며 녹취 후 Taguette.co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tags 형성 후 의미단위의 범주를 구성
 - 태그는 생성빈도가 1개에서부터 최대 17건까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음
 - 1차 생성한 태그는 이후 몇 차례 재검토를 거쳐서 중복적 표현을 하나의 태그에 포함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52개의 태그로 정리함
 - 일부 태그에서는 의미의 주체(공무원 혹은 협의체 위원)에 따라 동일표현이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차 코딩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을 기입

〈그림 IV-1〉 인터뷰 절사 자료를 통해 생성한 태그(tags)

위원들 간 친밀도	협의체와 타 단체와 협업	협의체의 경험축적에 대한 긍정적 인식(공무원)	수당지원 부족으로 회비 운영	사업별 참여유형 상이	협의체를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이 목적
통장 활성화	사업대상은 협의체 위원에 대부분 발 굴	협의체 사업과 활동에 대한 높은 신뢰(공무원)	위원/기부자 대상 사업내용 모니터링 및 공유	통장(협의회)와 사업 협력	사업별 참여위원 조정_팀장
낮은 수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민간위원장의 금전적 부담	협의체 활동이 곧 참여민주주의	회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	신규 사각지대 발굴의 어려움
협의체 수당지급의 불공정	통장 활동과 비교 시 부정적 상대적 박탈감	주민자치회와는 별도 구성 필요	주민자치회의 모호한 방향성(공무원)	공동모금회 배분기준 여전히 적용	사각지대 발굴에 협의체 역할이 유효하다고 인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참여	협의체 위원 수당 증액	주민자치회 분과 편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법 제정 이후 활성화/안정화	단체장 연례회의 참여	공무원의 열심
복지시설과의 연계	협의체의 높은 지역사회 기여도(공무원)	협의체는 주민-공공과 협력구조	위원들 간 관계성의 중요	역량강화교육의 세분화_전문화 필요성 인식	주민자치회와 협력 필요
공개모집 및 분야별 안배를 통한 위원 섭외는 부정적 인식	위원장의 긍정적인 리더십	협의체는 주민자치회와 다른 맥락(공무원)	사업별 참여위원 조정_위원장	정례적인 사업 내용 및 구조변경 회의 추진 필요	사업의 구성은 확보한 자원에 따라 구성
협의체의 목적은 사각지대 발굴	협의체 위원의 사업이디어 발굴	사업을 위한 회비 사용	주민자치회 분과 편입에 대한 긍정적 의사	협의체 활동 시 참여주민의 협조	협의체 위원을 통한 신규위원 섭외의 긍정적 효과
안부확인 사업의 어려움	아파트 관리소장과 친밀한 관계성	협의체 내 분과구성성의 불필요	새마을부녀회와 협력		

○ 총 52개의 형성된 태그(tags)를 2차 의미단위로 구분, 3차 의미단위의 연결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

- 동일한 문장이라도 앞뒤 문맥, 인터뷰 작성한 메모 등을 활용하여 부정적인식인지 긍정적 인식인지를 구분
- 가령 “사업별 참여위원 조정 역할”에 대한 Tag는 동일한 형성이지만 의미에 따라 공무원에게 많은 업무연락 및 조정 역할이 전가되는 경우와 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임원이 역할이 활발한 경우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구분됨
- 따라서, 동일한 태그라 해도 의미단위에서는 앞뒤 맥락과 인터뷰 시 메모 등을 활용하여 의미단위로 재분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태그는 통합하거나 삭제함

〈그림 IV-2〉 태그(tags)의 의미단위의 분류

제도요인		위원요인	사업요인	환경요인	운영요인
협의체의 경험축적에 대한 긍정적 인식(공무원)	낮은 수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위원들 간 친밀도	복지시설과의 연계	새마을부녀회와 협력	공무원의 열심
협의체는 주민-공공과 협력구조	협의체 수당지급의 불공정	위원장의 긍정적인 리더십	협의체의 높은 지역사회 기여도(공무원)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	단체장 연례회의 참여
수당지원 부족으로 회비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참여	사업대상은 협의체 위원이 대부분 발굴	협의체의 목적은 사각지대 발굴	협의체 활동 시 참여주민의 협조	주민자치회와 협력 필요
법 제정 이후 활성화/안정화	통장 활동과 비교 시 부정적 상대적 박탈감	공개모집 및 분야별 안배를 통한 위원 섭외는 부정적 인식	협의체 사업과 활동에 대한 높은 신뢰(공무원)	협의체와 타 단체와 협업	위원/기부자 대상 사업내용 모니링 및 공유
주민자치회와는 별도 구성 필요	민간위원장의 금전적 부담	협의체 위원의 사업이디어 발굴	사업을 위한 회비 사용	아파트 관리소장과 친밀한 관계성	공동모금회 배분기준 여전히 적음
	협의체 위원 수당 증액	위원들 간 관계성의 중요	협의체 내 분과구성의 불필요	통장 활성화	사각지대 발굴에 협의체 역할이 유효하다고 인식_공무원
	협의체 활동이 곧 참여민주주의	사업별 참여위원 조정_위원장	사업별 참여유형 상이		통장(협의회)에 협의체 사업 소개
	주민자치회의 모호한 방향성(공무원)	사업의 구성은 확보한 자원에 따라 구성	통장(협의회)와 사업 협력		사업별 참여위원 조정_팀장
	주민자치회 분과 편입에 대한 긍정적 의사	협의체 위원을 통한 신규위원 섭외의 긍정적 효과	정례적인 사업 내용 및 구조변경 회의 추진 필요		
	협의체는 주민자치회와 다른 맥락(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의 세분화_전문화 필요성 인식	협의체를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이 목적		
	주민자치회 분과 편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회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안부확인 사업의 어려움		
			신규 사각지대 발굴의 어려움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FGI 주요 내용 및 결과

1) 경기도의 정책적 요인

□ 수당지원의 긍정적 효과: 협의체 위원 활동회비로 재사용

-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 수당을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 동 협의체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월1만원 정도의 회비를 협의체 위원들로부터 각출하여 협의체 사업 수행 시 진행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수당지원은 해당 회비로 납부됨
- 회비의 사용은 긴급한 구호활동이나 협의체 활동 후 식사 등의 경비에 활용되어 수당지원에 대한 협의체 위원의 긍정적 인식이 있음

“갑자기 형편 안좋아지신 분이 나갔어요. 회원 중에 고기집 한다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일용직 근무 하시는 주민이 있어서 애들 교통비가 없대요. 이런 거 단톡방에 무조건 올려요. 그러면 저희 회비로 싸줘요(D동 민간위원장).”

“와서 보니까 다른 동에 없는 게 있었어요. 활동비 지원하기 전에도 회비를 걷어가지고 어려운 분들 긴급지원 집으로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했는데 그 회비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도 10~20만원씩 줘요. 카톡에 올려서 주겠다고요. 차비가 없으면 돈을 주면 안 되니까 학생한테 교통카드 전달해주고요. 저희는 지원금을 주기 전에도 회비를 주고 있어서 예산 부분에서도 위원장님이 이렇게 잘 해주세요.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참 잘되어있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회비를 조금씩 내고 있어요. 저도 따로 받는 건 없지만 회비를 내고 있죠(D동 담당 팀장).”

“다른 곳은 수당이 많은데 협의체 회의는 만원, 통장은 4만원.. 그래도 고마워하세요(M동 팀장).”

□ 낮은 수당액의 부정적 영향 1 : 낮은 수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협의체와 통장(협의회) 간 비교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 협의체 위원 대상 월1만원의 수당지원은 위원의 회비 납부 등의 측면에서는 긍

정적인 요인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활동비 및 회의비 등과 비교 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 특히 통장의 경우 행정의 최일선에서 관의 주요한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이며 이는 협의체 위원의 역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

“한 달에 두 번, 영상한 달에 두 번, 두 번 통장회의 하고요. 저도 2013년에 동을 떠나가지고 지금 작년에 왔으니까 7년 만에 왔는데 통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통장 활동과 수당하고 비례, 활동 사항하고 수당하고 비례를 해요(J동 팀장)”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통장 통장하고 비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통장이 회의할 때마다 통장 수당을 주고, 그 외에도 별도로 또 수당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참 석률이 엄청 높으시고, 이분들을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옛날에는 다들 하기 싫어했거든요. 지금은 하겠다고 오시는 분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이제 어떤 선의에 의해서 하지만 선이라는 것도 실비 정도는 해줘야 된다...(J동 팀장).”

“이게 중요한 사안이 제가 이제 기타 안건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일이 많아요. 위원님들 참여율도 높아야 돼요. 그려면 저희는 지금 한 달에 1만 원 주고 있잖아요. 주질 말든지, 만 원으로 뭐 하러 줘요(J동 민간위원장).”

“필요하다면 좀 더 위원분들 많은 금액은 지원을 바라지는 않아요.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소속이 돼 있어서 인정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 지금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제 주민자치 쪽은 그게 좀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복지 협의체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또 내부적으로도 했는데 또 협의체가 같은 또 단체장들이 여러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더 어필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죠(Y동 민간위원장).”

- 낮은 수당액의 부정적 영향 2 : 낮은 수당은 위원 및 위원장에게 사업수행 경비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있음

- 협의체 위원 수당은 대부분 회비로 쓰이며 회비는 활동의 빈도가 많을 수록 빨리 소진됨으로 그 이후는 협의체 민간위원장에 활동에 대한 경비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낌

- 이는 타 단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와는 다른 맥락에서의 부담감이 가중하여 작용하는데, 타 단체의 경우 참석수당이나 활동비는 오롯이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협의체 수당의 경우는 협의체 사업을 위해 회비로 다시 지출됨으로 위원들의 결속을 위해 민간위원장이 추가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또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회비를 걷어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죄송스러운 거죠,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봉사활동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거기다가 또 비용까지도 좀 하시고 또 하다 보면 또 자기 돈도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3만 원 5만 원 정도는 금액을 떠나서 저는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럼 내가 어디 나가서도 얘기하기에..(Y동 민간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거 홍보나 활동 사항에 맞춰서 식사비 나가지요. 그거는 너무 적어서 부담이. 팀장님도 부담이지만 위원장님들도 부담이에요. 위원장님들이 내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내라고 그래요? 위원님들 힘들게 일했는데 그 사람들보고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J동 민간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도 실비를 주는데, 실비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 되게 복지의 뜻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많이 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꼭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거의 실비 정도는 식비가 7천 원인 건 좋은데 곱하기 12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기가..(J동 민간위원장)”

□ 낮은 수당액의 부정적 영향 3 : 협의체 위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수당 미지급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수당은 해당 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와 동 단위 협의체 활동과는 역할이나 업무내용이 차별됨으로 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종사자라고 해서 협의체 위원 수당을 미지급 “사회복지시설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2명 중에서 요양원에 계신 분, 복지관에 계신 분 아니면 복지 시설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은 어쨌든 차별 대우를 받는다 생각이 들지요. (J동 팀장)”

“제 생각에는 시에서 시나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공무원들과 시나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거기까지는 저는 인정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 그렇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죠. 거기는 이제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이고 여기는 당연히 공무원이 빠져야 되지만 그치만 여기는 거의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J동 팀장).”

2) 법적/제도적 요인: 협의체와 통장 간 유사한 역할과 법률적 기반

□ 법/제도적 여건 마련의 중요성: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이후 동 협의체 안정화

- 수원시의 경우 2012년부터 각 동별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 “동 주민복지협의체”는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각 동별 구성된 주민과 공공 간 협력 기구로서 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사

- 과거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조례 상 운영하던 시기보다 2015년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정화 및 활성화

“약간 지금이랑 달라요. 저도 2013년에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때는, 그때는 정말, 왜 사람 부르면 아무도 안 오고 3명 와 있고, 저희 법에 실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나온 건 그렇고 그전에 했던 거는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건데 그때는 정체성을 거의 못 찾았거든요. 근데 딱 내려와서 봤더니 그때 했던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또 그때 모습일 줄 알았는데,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J동 팀장).”

□ 법/제도적 여건 마련의 중요성: 협의체와 통장 간 유사한 역할과 법률적 기반

- 각 동에서 협의체 활동과 역할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이는 협의체 운영 목적의 명확성과 법률적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인식
- 유사 사례도 각 동에서 가장 활성화가 된 단체는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이 또한 각각의 법률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함

- 통장의 역할은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 상 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하부조직(제4조의 2)”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활동보상금이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이·통장들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들의 업무는 ①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②각종 사실 확인, ③복지 지원 대상자 확인, ④비상연락 업무, ⑤지역 개발 등 정부 사업추진협조, ⑥기타 동·리 행정에 관련된 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윤영근·박해육, 2016)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한 통장의 역할처럼 행정복지센터와 민관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사소통,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모니터링, 각 동별 특화사업 추진, 민간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

○ 협의체 활성화 또한 법률적 여건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하며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역할이 상이하지만, 통장과는 역할이 유사하다고 인식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공공만이 할 수도 없고, 민간 부분은 또 이제 공공 부분도 그런데 저는 이제 한 6대 3, 7 대 3으로 공공이 아직까지는 좀 갖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권한이라는 부분이 적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공-민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에서 좀 터치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Y동 민간위원장).”

“길가에 노숙인도 병원에 있다 나오신 분들 많은데 의사 2명이 판정해서 내보내는건데 그분들이 또 수급자로 들어오고 그러죠. 관리가 안되니까 일대일 매칭으로 되어야해요. 사회복지사든 공무원이든 자원봉사자든..나오긴 하는데 연계가 안되니까 다들 수급자가 되고 사각지대가 되고 협의체에서 커버를 해주는거죠(D동 팀장)”

“우리는 휠체어 들어오면 로테이션 해서 병원입원 갈 때 휠체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반기면서 해주는 곳을 처음 봤대요. 그만큼 우리가 자원이 없어서 그렇죠..위원장님이 자원발굴하고 계획하고 수립까지 하고 우리는 서포트 해주는 상황인거죠.(D동 주무관)”

“발굴을 해서 오시고, 위원님들이 더 많으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있으면 그렇게 해서 결연 맺기도 하고 있어요. 80~90% 발굴해오시는 분들이예요(M동 주무관).”

3) 법적/제도적 요인: 주민자치회 출범이라는 환경변화에 우려

□ 주민자치회의 도입은 동 협의체 활동에 있어 중요한 환경변화로 인식

- 수원시는 '21년 기준 6개 동(율천동, 송죽동, 서둔동, 호매실동, 행궁동, 인계동, 매탄2동, 광교1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자치회에서는 복지분과를 구성하고자 함으로 이에 대한 구분 필요

- 주민자치회에 대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의 확대 기구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현재처럼 주민자치회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립된 단체처럼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

“주민자치회 내에 복지 분과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분명한 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는 거기서 우리를 넘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하는 거는 우리하고 좀 분명한 선을 좀 그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J동 민간위원장)”

“차라리 주민참여 복지사업으로 하되, 협약으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섞어버리면 희석이 되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게 되버려요. 그 방향을 봐서 우리랑 연계를 해서 일을 해야되요.(D동 민간위원장)”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모호해질 것 같네요. 신속하게 처리하는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사람 저사람 말 듣다 보면 힘들어지기도 하고요.(M동 민간위원장)”

“자생력이 없는 단체까지 다 끌고 갈 순 없지만, 특색 있는 단체는 각각 가는게 좋은 것 같아요(M동 팀장).”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각자 위원회 역할이 더 극대화되기 위해서 하는거지, 조직을 위해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손을 보지 않고 그대로 놓고 가면서 자치회는 복지분과하고 또 무슨 분과가 좀..(H동 팀장) “

“지금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잘하시잖아요.(S동 팀장)”

□ 동 협의체와 주민자치회는 “공공과의 협력구조”에서 차이가 남으로 구분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마을 내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민간 주민의 단독 혹은 공공의 단독적 행위가 아닌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구조

적으로 형성된 것임

- 반면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지방자치를 행정동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임으로 자치분권/참여자치라는 측면에 더욱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 동 협의체와는 큰 차이점임

“왜냐하면 이게 주민자치회로 들어가면 그건 민간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공공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서로가 채워주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주민자치회는 어디로 불러 갈지 모르는 거야. 자꾸 공무원의 분야를.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기술 있잖아요. 내용은 있을지 몰라도, 이 예산을 만진다던가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던가. 그냥 민간끼리 이렇게 놔두면 그분들 힘드시죠.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에 브레인이고 저희는 이제 팔다리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조직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미 갖고 있는 거를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봐요(J동 팀장).”

“저는 확실하게 2번이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공공만이 할 수도 없고. 민간 부분은 또 이제 공공 부분도 그런데 저는 이제 한 6대 3, 7 대 3으로 공공이 아직까지는 좀 갖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권한이라는 부분이 적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공 민간의.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에서 좀 터치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Y동 민간위원장).”

“긴급돌봄 가정이 생기면 바로 전화가 와요. 공동모금회에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고, 회의하고 안건 올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거죠. 협의체하고 동아랑 합의가 되어야 하는건데 우리 팀장님이 새로 오신다해서 얼굴도 모르지만 지금 팀장님 이랑 있는 것처럼 활성화가 될지 걱정도 되죠. 1년 넘게 계속 같이 하다보니까, 새로 팀장님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거야. 언제부터 와서 협의체하고 일을 할지 안할지도 코로나가 급하니까..(D동 민간위원장)”

4) 협의체 위원의 역량 요인: 위원의 역량범위에 따라 사업범위 좌우

- 동 협의체 사업은 협의체 위원의 활동역량, 확보 자원범위에 따라 사업의 구성이 달라짐

- 협의체의 사업은 협의체 위원의 다수가 동시에 참여하는 사업의 수는 1~2개 정도이며 대부분의 사업은 3~5명 정도의 위원이 사업에 따라 순환하여 참여하고 있음

- 동 협의체의 활성화는 모든 협의체 위원이 하나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사업 구성도 필요하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소수의 위원이 적정히 참여하여 상시적인 참여구조도 중요한 활성화 요인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해선 사업의 내용과 더불어 민간위원장의 조정역할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량으로 판단됨

“그거는 저희가 그 행사에 맞게 몇 명 나와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이걸 나눠서 해요. 다들 이제 바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들만 다 나오시는 분만. 다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 누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분들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지. 지루하지 않지. 나가는 사람만 계속 나가면 나는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유들을 해서 그다음에 행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러세요.(J동 민간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지금 위원회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J동 팀장)”

“위원님들 규모도 작고, 20명이라고 치면 100% 다 활동 하기엔 어렵기도 하고요. 발굴 한다고 하면 캠페인 다 같이 하고 이런식으로 되고 있지. 발굴되는 분과에서 발굴만 해라 라고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M동 팀장).”

- 협의체 사업의 아이디어발굴은 협의체 위원이 대부분 제안 및 발굴되며 이는 협의체 위원들의 자원연계와 활동범위에 따라 사업 아이디어가 나타남

- 사업의 발굴, 대상자의 발굴 뿐만 아니라 사업의 속성 또한 협의체 위원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안부확인 등은 협의체 위원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음
- 협의체 내 구조적 측면에서도 발굴분과와 나눔분과의 운영은 사실 상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임

“원래는 없었고 위원님이 1동 2동 드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없어졌었어요. 위원님이 여기서 하자 해서 한거예요. 한지는 1년 좀 안됐을걸요? 같이 하자 해서 한거예요(M동 민간위원장).”

“우리 회원들 회의를 할 때 들었어요. 우리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주민들이 밖에 나오고 소통을 해야되는데 서둔동이 집값이 싸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몇 년 돌아보니까 무속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두남처럼 못하고 한번이라도 들여다 보면 이야기라도 하잖아(D동 민간위원장).”

“그게 그 어르신만 1대 1이 아니야. 그 가족까지 연계가 돼요. 이제 그 가족 중에서 그 사람이 좀 어떻게 알고 왔어. 이렇게 이제 역으로 들어오면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권장은 하지만 저희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행정복지센터예요, 이러면 아 동사무소에서 왔구나. 그런데 저희 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에요. 이러면 그 사람들은 말이 길어가지고 못 알아. 어떤 사람이 전화 왔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J동 민간위원장) “

□ 위원들 간의 관계와 위원장의 리더십이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협의체 위원의 원활한 참여는 협의체 활성화에 중요한 척도가 되며 위원장의 사업 참여 조정역량이 중요

“제가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팀장님한테도 오늘 몇 명 필요해요. 이제 제가 의논을 해서 이제 공지를 제가 올리지요(J동 민간위원장).”

“회원들이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매주 화요일에 장 보고 하는 멤버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아직까지 불만 불평 한 마디도 안해요, 이 더운 여름날, 불 옆에서 음식을 해야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위원장을 이번에도 하죠.(D동 민간위원장).”

“위원장님이 역할을 잘 해주시니까요. 단체장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있는데 공유도 많이 하고 자연스럽게 단체 회의에 총무를 하다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를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S동 주무관).”

○ 위원들 간 관계가 중요함으로 신규위촉 위원의 영입 등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저한테 협의체가 뭐예요? 저도 관심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문의는 여러 번 받거든요. 근데 저희가 협의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부담스러우신지, 생각보다 많은데 자기는 나 시간 날 때 가서 재능 기부 잠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끝까지 가입이 되시는 회원으로 위촉되시는 경우는 드물고 같이 내가 협의체를 하고 있는데 너도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게 사실은 그 그룹에도 좋고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Y동 팀장).”

“루트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일을 하실 분을 추천하기도 하고, 플랜카드를 보고 공개모집 해서 연락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이쪽에서 하고 싶다 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동네에서 하다가 그만두셨는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22명이지만 캔슬되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여러 가지 고려한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라 저희가 검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선별을 하죠. 왜냐하면 마음만 갖고 되는게 아니니까, 무작정 많은 것 보다는 열심히 참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H동 민간위원장).”

“기부자분들도 저희하고 업무가 같이 계신 분들을 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기부도 받고 위원으로도 위촉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연결되면서 기부도 계속 이루어지고 또 그 자원 가지고 또 이렇게 활동도 많이 폭이 넓어지고요(Y동 민간위원장)”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적합하겠다 해서 추천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조** 위원님은 협의체에 맞겠다 해서 추천받은거거든요. 통장님 같은 경우는 활동해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요청드린거예요(M동 팀장).”

5) 운영지원의 노력 요인: 공공의 노력(단체 협조, 연계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임으로 공공의 적절한 노력도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

- 협의체의 사업은 독립적인 민간단체의 사업이 아니며 공공과 직접적인 연계와 협력이 필요함
 - 협의체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측면의 인식보다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협력적 구조임을 공공에서 먼저 명확히 인지함이 활성화의 기본적인 요인임
- 또한 협의체 운영과 활동에 대한 지지적 노력도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은 주로 협의체 사업과 연관되는 통장협의체, 각 동 단체장 연석회의, 복지 시설들과 협력 등의 관계에서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는 역할이 중요
 “행정 팀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지만 저희 복지팀 안내 사항은 우리 복지팀장님이 가서 다시 별도로 안내를 하고 그래요 통장 회의 때, 협의체 안건이라든가 홍보 사항이라든가 도움 할 거는 일단 행정 팀장님이 진행을 끝나면 우리 복지팀장님이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대면이라 다 뭐든지 다 이게 영상 통화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비대면 아니고 대면일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J동 복지팀장).”
 “매달 1회 단체장 회의가 있어요. 단체끼리 상황, 사업을 공유를 해요. 도움 받을 수 있는건 받고요. 저희는 늘 해요. 통장회의는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늘 참석해요. 도움 받을 건 받고, 공지할건 하고요(M동 팀장).”
 “각 단체장들 회의가 있어요. 월 1회씩 모여서 안건, 의견개진, 공유하다보니까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H동 팀장).”

□ 담당 “공무원의 열심” 또한 활성화에 기여

- 협의체 위원은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나 공무원 3인(동장, 팀장, 주무관)이 포함되어 있음
- 협의체 활동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공무원의 열심” 이 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는 협의체 사업의 실적을 공무원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서 달성하는 의미로서 “공무원의 열심”이 아니며 협의체 위원의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대응, 협의체 활동에 대한 지지적 노력 등을 의미함
 “주무관님이라곤 간사님이라곤 저랑 앞날에 장을 보고, 수요일에 계속 줌으로 회의를 했어요. 너~무 진짜 이렇게 부지런한 팀장님이라곤 주무관님은 처음 봤어요.(D동 민간위원장).”
 “저희는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건 어때요? 라고 말하는데 팀장님이라곤 주무관은 열성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시죠(S동 민간위원장).”
 “리더쉽과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톡방 같은 것도 제가 거기 들어가서 안내를 일방적으로 하고 의견수렴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 담당자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되고, 실적이거나 그런 모습들이 담당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달라지더

라고요. 저도 중간에서 소통하는 역할만 하고, 스스로 하계끔 하고 있어요. 안되면 안 되는데로 해결방안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S동 주무관)."

"그때는 뭘 할까 하다가 색다른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걸 받고 나니까 너무 감동이 됐다고 해서 아이들을 내줬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팀장님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상인회하고 협조가 돼서, 처음에는 종이 박스에다가 하고 구성을 알차게 해서 의미있는 행사가 됐어요(H동 위원장)."

6)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요인: 수원시 차원의 노력

□ 개별 동에서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심화된 특성화 교육이 필요

- 동 협의체 위원의 평균 활동기간은 50% 이상이 약 4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음으로 현행 기본교육 위주에서 향후는 전문/심화교육이 필요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동 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협의체 민간위원을 대상으로는 개별화되고 세분화된 교육 필요
 - 협의체 민간위원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
 - 기본교육에 대한 것은 이미 협의체 활동이 4~5년 이상 된 위원이 많기 때문에 활동의 의미 등에서의 교육은 충분하다고 인식

"사업으로 같이 하죠.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교육이 늘 가보면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걸 좀 자랑을 하자면 전문 수납 교육을 했잖아요. 이렇게 좀 전문적인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주제를 치매 교육, 치매 하나는 알게 됐잖아요. 대상자 중에 치매가 많으니까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병에 대한 이해 이런 것처럼 약간 포인트가 있는 전문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뭔가 너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무엇인가. 이런건 지났어요(J동 팀장)."

"(교육컨설팅 사업을) 수원시협의체 신청을 했고, 1년에 1~2번 트렌드를 보면서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서 연구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학습가치도 있고, 위원님들끼리 얘기하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고있어요. 그렇게 해야 뒤쳐지지도 않고 바뀌는 복지 트렌드에 맞춰갈 수 있어요.(S동 주무관)."

"한 가지 중심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교육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H동 팀장)."

“우리 3월에 교육을 했어요. 협의체라는게 어떤건지 감이 안왔는데 역량강화, 본인 역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협의체가 어떤건지 교육을 듣는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반기에 또 다른 교육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M동 팀장).”

“위원님들끼리 회의할 때 나왔던 내용이 ‘아동학대교육’ 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나온적 있었거든요. 이걸로 교육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M동 주무관).”

7) 협의체 활성화 요인과 방향에 대한 FGI 주요 시사점

□ “동 협의체 활성화”는 협의체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협의체 위원 간 봉사동기 및 친밀도 정도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음

○ FGI 전반의 코딩과 의미단위의 연결을 통해 “동 협의체 활성화”의 수준은 대략 4가지 정도로 요약

- 첫째, 동 협의체의 경험 축적에 대해 공무원이 해당 동의 복지자원으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
- 둘째, 동 협의체 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무원의 높은 신뢰도
- 셋째, 동 협의체의 활동이 지역사회 내 갖는 기여도
- 넷째, 동 협의체 위원들의 봉사동기 및 친밀도 정도

□ “동 협의체 활성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6가지로 도출

○ 첫째, 경기도의 정책적 요인으로 수당체계 개편

- 동 협의체는 매달 1만원의 참여수당이 경기도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협의체 위원의 회비로 재사용된다는 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낮은 수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통장과 비교 시 박탈감을 야기
- 따라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당체계를 증액하여 현실화가 필요함

○ 둘째, 법적/제도적 요인은 협의체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2년부터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조례에 의해 구성 및 운영하였으나 사실 상 활동이 미미하였으며 법 제정 이후 체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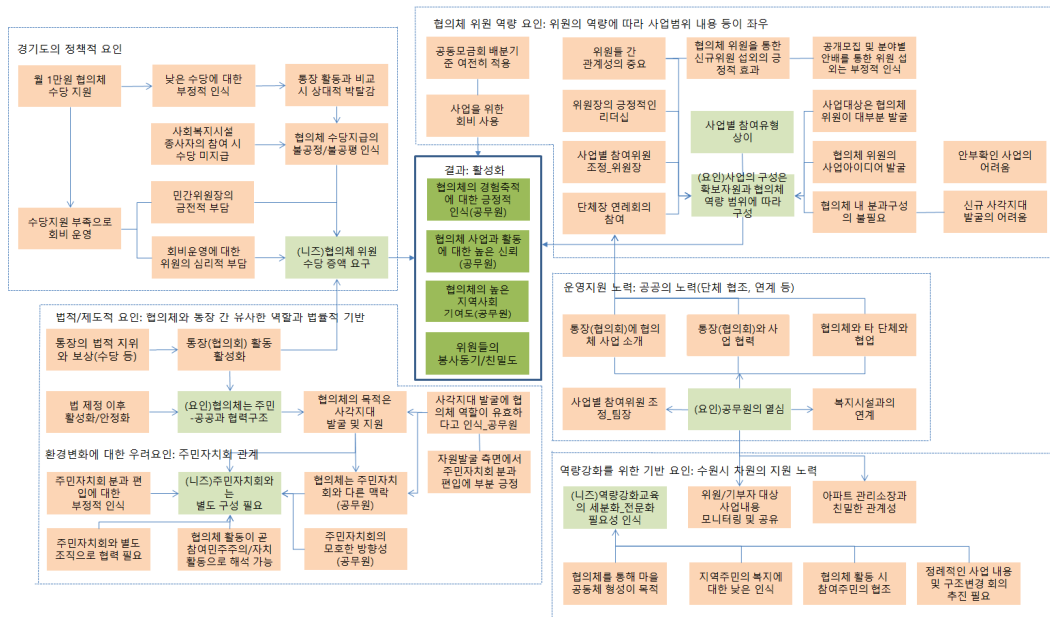
교육, 경기도 차원의 실적관리, 수원시 차원의 실적 및 포상제도 운영 등이 가능하게 되어 협의체가 활성화되는데 법적 요건이 중요함을 도출함

- 협의체와 통장 간 유사한 역할을 가지지만 통장에 비해 협의체 위원 활동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구조로서 해당 관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함
 - 통장 역할 또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나 협의체에 비해서 제도적 지원 범위가 넓음으로 협의체와 통장 간 법률적 기반과 지역사회 내 역할 측면에서 유사함으로 협의체를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주민자치회 실시라는 제도적 환경변화는 협의체 활동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
 - 주민자치회는 동 협의체와는 다른 목적의 독립적 단체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협의체의 지속가능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호 독립적이고 구별된 운영이 필요
- 넷째, 협의체 위원의 역량에 따라 사업범위가 좌우됨으로 역량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노력 필요
 - 협의체 활성화는 협의체 내 구조적 요인(협의체 내 분과구성 및 각 단체나 기관 대표자로 구성)보다는 협의체 위원의 인적자원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발적 봉사동기를 가진 위원을 육성하고 지지하는 노력이 필요
- 다섯째, 협의체와 타 단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공공의 노력 필요
 - 협의체는 위원을 중심으로 공공의 복지팀과 밀접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나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 타 단체와 연계·협력의 촉진은 협의체 위원장의 노력보다는 공공의 복지팀장이 동 단위의 연석회의, 정례회의 등에서 협의체의 사업과 내용 홍보, 그리고 협조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여섯째, 역량강화를 위한 수원시 차원의 지원 노력

- 동 협의회 위원의 역량은 협의회 사업범위와 자원연계 역량으로 이어짐으로 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심화 혹은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여 추진함이 필요

〈그림 IV-3〉 의미단위의 연결



V.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진단 및 발전방안

1 협의체 위원 대상 체계적 역량강화 교육 운영

□ 동 협의체/통장/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주민참여 단체에 대한 상시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동 협의체의 사업내용과 활동의 범위는 협의체 위원의 역량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으로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지속적 시행
 - 동 협의체 사업의 아이디어 발굴은 대부분 협의체 위원이 제안하여 사업화 됨
 -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욕구의 진단에서 비롯하기보다는 해당 지역 내 협의체 위원의 직관과 경험에 기초하여 제안되는 경향이 큼
 - 또한 협의체 특화사업의 경우는 가용한 민간자원의 범위 내 사업 등이 형성됨으로 44개 동의 사업이 유사성을 띄게 되는 직접적 요인이 됨
 - 44개 동의 협의체 특화사업 중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나누거나 전달하는 사업이 전체 사업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협의체 위원이 활동하기 용이한 사업이기 때문임
 - 밑반찬 지원 및 나눔, 도시락 배달 등의 특화사업의 경우는 기부자 혹은 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수급이 가능함으로 44개 동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미용서비스, 세탁서비스 등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는 협의체 위원 내 해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위원 존재 여부, 혹은 협의체가 발굴한 지역의 사업장에서 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따라 사업구성 여부가 달라짐
 - 협의체 활동이나 특화사업 개발 측면 이외에도 협의체 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리더십 교육, 역량강화교육 등이 요구됨
 - 협의체 연간 사업에 대한 정례적인 진단과 재설계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협의체 활동이 되도록 2~3년마다 1번씩 협의체 사업계획의 재수립 과정이 필요
 - 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 교육은 협의체 활동에 대한 기본교육 보다는 특성화된 교육을 설계하여 운영함이 요구됨
 - 2016년부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한 기본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협의체 위원들의 평균 활동 년수는 약 4년임으로 협의체 구성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해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협의체 위원 대상의 교육은 심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임

○ 새로운 주민의 발굴 측면에서 관내 타 단체와 주민 대상 교육 필요

- 수원시 협의체 전체 특화사업들 중 사각지대 대상 발굴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업
이나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사업비중은 7% 수준임
- 협의체의 고유 목적사업인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은 오히려 통장이 더 효과
적이라고 인식(FGI 결과)
- 이러한 측면에서 각 동별 약 20명의 민간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기란
한계가 있음으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그 외 사회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
- 타 단체들과의 협력을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타 단체와 일반주민도 참여
할 수 있는 교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 서울시의 경우도 ‘동복지대학’을 통해 오픈(open)강좌 형태로 새로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 각 동별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주관: 동 복지대학의 주관은 각 동 협의체가 주관
- 주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대상: 동 주민 누구나
- 운영기간: 약 6주간

〈그림 V-1〉 서울시 동 복지대학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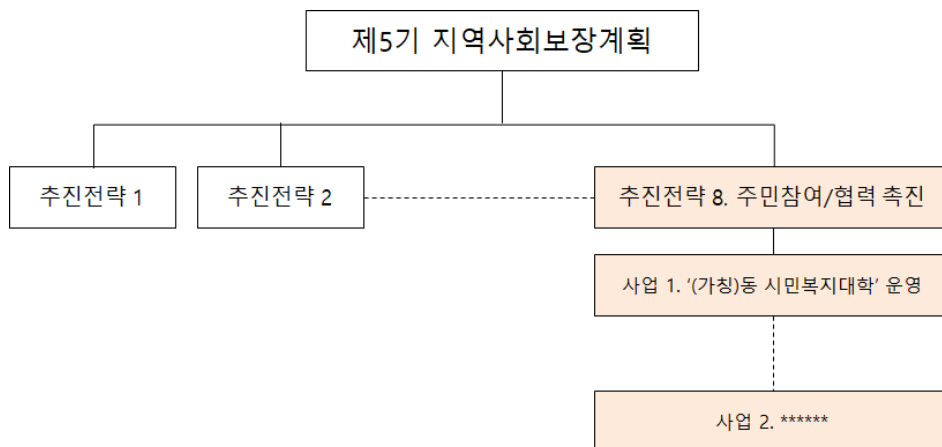
 <p>서울시 해화동 동복지대학 2학기 입학식 현장</p>	 <p>서울시 도봉구 동복지대학 입학식 모습</p>	 <p>서울시 방아2동 동복지대학 1기 모집 포스터</p>	 <p>서울시 상암동 동복지대학 1기 모집 포스터</p>	 <p>서울시 성수1가제2동 동복지대학 1기 모집 포스터</p>
서울시 해화동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방아2동	서울시 상암동	서울시 성수1가제2동

□ 수원시 협의체 내 “(가칭) 시민복지대학” 을 운영

- “(가칭) 수원시 00동 시민복지대학”을 운영하여 동 협의체 사업 내 관리 및 마을
복지계획 중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

- 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주민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각 동별 복지대학을 운영하여 사회단체 회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 실시
 - 4개 구(區)와 44개 동(洞)별로 환경과 인프라 형성 정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운영은 적합하지 않음으로 4개 구 내에 소수의 동을 선정 검토
 - 시민복지대학은 동 협의체의 외연 확대 및 주민인식을 개선하여 협의체 활동에 가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과 단체를 연결하는 것임으로 각 동별로 실행 가능한 수준을 검토하여 운영될 것이 필요
- 2022년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각 동의 마을복지계획 세부 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5기 계획과 동 협의체 사업-마을복지계획 간의 연계를 통해 수원시 협의체의 기획과 공급역할 가능
- 수원시 전체 측면에서 공통역량과 각 동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 설계를 위해 수원시 협의체에서 통합적인 기획관리가 요구
 - 제 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도 동별 주민참여와 협력촉진을 위한 시 협의체의 연계와 역할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여 지속성을 확보

〈그림 V-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된 ‘(가칭)동 시민복지대학’



2 동 단위 주민참여 방식의 구분

□ 동 협의체-마을복지계획-주민자치회 간 역할 및 연계 등의 방안 모색 필요

- 현 정부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력, 지역력 등을 목표로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정책방향을 제시
- 주민참여의 수단 또한 부처별, 사업별 유사하면서도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공공 및 참여 주민 등도 혼란이 발생
 - 2021년 수원시 관내 8개 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참여와 근린자치를 목적으로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동 행정에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장하는 사업임
 - 주민자치회는 30~40명으로 구성되며 영역별로 각 분과를 구성할 수 있음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 내 복지분과를 구성·운영 중에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보건복지팀 소관 업무로 동 협의체 사업범위와 중복적이면서도 초과하여 수립되고 있음
 - 수원시의 경우 현재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준비과정 중에 있지만,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별도의 “마을복지계획수립실행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마을복지계획수립실행단”의 구성·운영에 대부분 동 협의체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는 타 단체나 일반 주민이 참여하고 있어서 100% 동 협의체의 사업이나 주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 이는 수원시가 향후 각 동별 마을복지계획을 수립 시 동 협의체와는 별도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조직과 시민을 구성할 것인지, 혹은 협의체와 동일한 구성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숙의과정이 필요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을복지계획 수립은 읍면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이는 주민자치회 내 복지분과 구성으로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임
 -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의 구성은 의무·필수 사항이 아님으로 각 지역에서 자체로 구성

-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 구성 역시 약 7~10명 정도 수준으로 구성됨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이해도/실행력제고/주민의견수렴 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현재 23개 시군 16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시군 내에서 동시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과정에 있는 읍면동은 155개 읍면동으로 파악
 - 이들 155개 읍면동에서 상당부분 주민자치회와는 별도로 “마을복지계획실행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기구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대부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의 주요 구성원은 읍면동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지원(교육, 의제설정 등)하는 주체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참여주민 구성, 참여주민에 대한 교육기획, 주민대상의견수렴,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함으로 시군 협의체가 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표 V-1〉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시군과 해당 시군의 마을복지계획 수립 현황

구분	지역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 여부	개수	제정일자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	수립 주체	지원 주체	지역 수
1	가평군	○(시범실시)	-	2019.12.23	2022년 수립예정 (가평읍, 설악면)	추진단	군 협의체	2
2	고양시	○	39	2021.07.13. (전부개정)	X	추진단	시 협의체	-
3	광명시	○	18	2021.06.10. (일부개정)	2020년 수립	추진단	시 협의체	18
4	광주시	○	-	21.06.28(제정)	X	추진단	시 협의체	-
5	구리시	○(시범실시)	1	20.09.23(제정)	X	추진단	시 협의체	-
6	군포시	○(시범실시)	6	20.05.11(제정)	-	추진단	시 협의체	-
7	김포시	○	6	20.10.30 (일부개정)	2019 수립 준비	추진단	시 협의체	1
8	남양주시	○	2	21.04.08 (일부개정)	X	추진단	시 협의체	-
9	부천시	○	10	21.07.26 (일부개정)	2021 마을복지계획 수립(교육)	추진단	시 협의체	3

구분	지역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 여부	개수	제정일자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	수립 주체	지원 주체	지역 수
10	성남시	○	-	20.12.14(제정)	-	추진단	시 협의체	-
11	수원시	○	8	20.07.10 (일부개정)	2021 마을복지계획 수립(교육)	추진단	시 협의체	1
12	시흥시	○	12	20.10.07 (일부개정)	○	추진단	시 협의체	18
13	안산시	○	2	21.09.29 (일부개정)	2021년수립(4개동), 2022년 전체수립예정	추진단	시 협의체	4
14	안양시	○	-	20.07.24(제정)	X	추진단	시 협의체	-
15	여주시	○(시범실시)	3	20.12.15(제정)	2021 마을복지계획 수립(교육)	추진단	시 협의체	12
16	오산시	○	3	20.11.06 (전부개정)	2021 마을복지계획 비전선포식	동 협의체	시 협의체	6
17	의왕시	○	-	20.11.16(제정)	2021 마을복지계획 수립선포식	추진단	시 협의체	2
18	의정부시	○(시범실시)	14	21.07.09 (일부개정)	2021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및 발대식, 교육	추진단	시 협의체	5
19	이천시	○(시범실시)	-	21.05.01 (일부개정)	2021 마을복지계획 수립(교육)	추진단	시 협의체	2
20	파주시	○	17	20.07.10(제정)	2021 마을복지계획 수립	추진단	시 협의체	16
21	평택시	○(시범실시)	7	19.11.08(제정)	2021 마을복지계획 교육 및 육구조사	추진단	시 협의체	23
22	하남시	○(시범실시)	10	21.08.12 (일부개정)	2021 마을복지계획 수립(교육)	추진단	시 협의체	14
23	화성시	○(시범실시)	15	19.11.15 (전부개정)	2021 마을복지계획 수립, 업무협약, 활동개시	추진단	시 협의체	28
			173					155

□ 향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추진 시 각 동별 주민 참여 유형을 고려

-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주민참여 방식을 고려 시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필요함
 - 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추진 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협의체 외 주민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협의체 중심적인 마을복지계획 수립은 협의체 활성화의 동인이 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외연 확장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행정적 측면에서 관리가 용이하며 협의체 위원이 지역복지와 계획에 대한 높은 이해수준은 마을복지계획의 목적과 의제발굴에 긍정적 효과로 발휘됨

- 단점으로는 협의체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협의체 사업 범위 내로 마을복지계획이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의체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경우 별도의 주민참여(복지의제에 대한 현장투표 등)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표 V-2〉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및 주민참여 방식

주민참여 방식		주요 특징	
협의체 중심형		방식	협의체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
		장점	계획수립 과정이 용이하고 행정에서 관리 용이 협의체 활동을 촉진하고 참여/결속에 체계성 확보 계획이행의 성과 도출이 용이
		단점	협의체에 지나친 부담 마을복지계획의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협소 협의체의 역량범위 내로 사업이나 계획범위 한정
		고려 사항	인구가 많은 동 지역에 적합 사회단체 간 개별성이 큰 지역상태에 적합

□ 주민자치회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운영은 별도로 구성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핵심적 자원은 협의체 위원이며 협의체 위원의 역량 범위에 따라 사업범위 및 지역 내 공헌도 등이 달라짐
 - 협의체 위원은 자발적 봉사동기에 따라 협의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전적·시간적 자원을 투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 협의체 위원의 대다수는 협의체와 주민자치회와 별도로 구성 및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협의체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함이 필요함
-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활동과 정기적인 활동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위기 및 긴급한 사항에 대해 즉시적인 의사결정과 자원동원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동 협의체가 가지는 장점은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주도성을 갖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자원연계활동에 대한 탄력적인 활동이 가능함

- 그러나 주민자치회와 연관되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총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의사결정 절차와 단위 또한 혼란이 발생하여 협의체 위원의 이탈이 예상
- 새롭게 시작하는 주민자치회 내 분과 구성 시 가급적 복지분과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수원시 차원에서 권장하여 중복적인 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수원시의 체계적인 기획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부서 간 업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례적 회의체 운영 고려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의 소관부서가 각기 다르며 각각의 정책목표도 상이하나 작동되는 지역과 활동의 측면은 유사함으로 수원시 본청 내 부서 간 업무 교류와 협력이 필요
 - 동 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와 동 협의체가 동시에 구성 및 운영되지만 시 본청 단위에서는 각각의 담당이 다름에 따라 해당 동에서는 혼란이 발생
 - 구체적으로는 주민자치회 내 복지분과 운영 여부, 마을복지계획의 주민총회 추진 여부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 본청 내 부서 간 상호 협력이 우선 필요
- 부서 간 정례적 회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자치분과'와 '복지정책과'가 동 단위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련한 모니터링 역할을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

□ 수원시 협의체의 기획·관리 역량노력을 지속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시 복지정책과와 함께 연간 우수 동 포상, 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21년 기준 동 협의체 수립·점검 2회, 동 협의체 활성화 연구, 동 협의체 대상 교육 6회, 구별 간담회 4회, 코디네이터 심화과정 1회, 성과보고회 1회 등의 사업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도비 보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협의체 운영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함
 - 가령, 매년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서 취합하는 서식에서 각각의 현황 파악 항목에 대한 명확한 재정의 과정을 통해 실적 기입의 기준을 통일하여 운영 필요
 - ex) 수원시의 경우 2019년 사각지대 발굴 가구는 12,940가구이며, 2020년에는 18,095가구이며 이는 '19년 기준 한 개 동에서 평균 294가구를 발굴하는 것이며 이렇게 매년 사각지대가 발굴되면 수원시 관내 모든 사각지대가 발굴되어야 하는 모순을 갖고 있음

- 이는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운영실적 수집 항목에 대한 정확한 용어정의와 이에 대한 각 동의 이해가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임
- 또한 실적 등의 산출 시 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과대추정 혹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실적기입이 나타날 수 있음
 - 일부 사업의 과도한 빈도나 대규모 일회성 사업의 참여자를 연계실적으로 포함하는 등 과대추정이 나타남
- 이러한 원인에는 복지부차원에서 취합하는 실적 자료의 분류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동 협의체가 만6년을 지나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과거와 현재의 노력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운영실적 항목에서도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민간자원연계, 자원연계 항목이 신규 발굴과 개시 및 종료에 대해 파악할 수 없음

〈표 V-3〉 동 협의체 연간 운영실적 취합을 위한 보건복지부 관리 양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부 실적)
1. 일반현황	1)협의체 명칭	명칭
	2)사업운영계획	연간계획 수립 결재 여부
		수립시기
		미수립 사유
	3)동협의체 운영세칙	여부
2. 위원구성 현황	1)협의체 참여위원 수 및 구성	13개 위원 자격 구분
	2)협의체 위원장 유형	공동위원장 여부
3. 운영현황	1)회의 운영 및 안건	회의 개최 수, 참여인원 누계, 회의안건(운영세칙 마련, 위원장 선출, 복지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발굴 조사, 지역자원 발굴연계, 특화사업 기획 운영, 그 외)
	2)교육/워크숍 운영	교육개최, 워크숍, 참여인원
	3)홍보현황	신문/방송 게재, 물품제작
4. 운영실적	1)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가구)	발굴 건
	2)민간자원 발굴	자원발굴(건)
		자원발굴 금액(천원)
	3)자원연계	서비스연계(건)
	4)자원발굴 지원시스템 구축	업무협약기관, 협약기관 계좌 모금액, 추진사업 실적
	5)특화사업	사업 수(개), 총예산, 사업명

- 따라서, 수원시 차원에서 별도의 동 협의체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양식을 구성하여 사업별 모니터링 및 지원을 위한 수요파악으로 활용함이 필요함
- 44개 동 협의체 사업현황 조사결과 약 40%에 달하는 사업이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며 이중의 상당부분은 협의체 위원이 다수로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그 일부 사업들 중에서는 협의체 특화사업계획 내에서 관리 및 운영되기 보다는 ‘보건복지팀’ 혹은 ‘맞춤형복지팀’과의 사례관리 과정에서 추진되는 사업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사업유형들 중 단회성으로 그치는 아동청소년 대상 용돈 지원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등은 협의체 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사실 상의 관리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추진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 동별로 사업의 종류와 수가 다양하지만 사업의 목적과 대상, 수행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수원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다는 점임
 - 이에 동 협의체 연간 사업에 대한 수원시만의 별도의 사업별 관리 양식을 구성하여 지원계획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표 V-4〉 동 협의체 사업별 모니터링 양식(예시)

1)사업 목적				2)당초계획		3)사업수행 결과				4)사업별 지속성(명)		
연번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 유형	제공 대상	대상 인원 (명)	사업 수행 수 (연)	협의체 위원 참여인원 수 (누적)	지원 건수 (누적)	연간 지원의 화폐 가치 (원)	신규	기 존 유 지	지 원 종 료
1	사업1			노인	5	4		20	000	1	3	1
2	사업2			아동	5	12		60	000	5		
3	사업3			저소득	5	2		10	000	5		5

4 정책적 지원 노력의 강화

□ 실비 지원(회의참석 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협의체 위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 동 협의체 위원과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간에는 지역사회 내 역할, 공공행정의 효율성 보완 측면에서 상호 유사한 수준이라 판단할 수 있음
 - 법률적 지위와 구속력 측면에서는 통장의 구성 및 운영에 비해 동 협의체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임
 - 통장의 경우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설치된 통에 대해 위촉된 자이며 조례에 따라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는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을 설치할 것인지, 하부조직을 설치한다면 그 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를 통해서 통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
 - 반면 동 협의체의 경우는 ‘조직’이 아닌 ‘기구(협의체)’로서 공공의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시행령 제7조)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굴 및 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공의 역할에 대한 협력적 기능 및 지원 역할로 규정
 - 한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구성되는 법률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종전의 주민자치 위원회의 기능을 전환하여 읍면동 단위의 근린자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협의체,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간 설립 목적이 상이하나 지역 내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으나 법률적 기반,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의체가 취약

- 협의체와 통장의 경우 주요 역할(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과 유사하지만 실비지원 등 지원과정과 운영의 체계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
 - 통장의 경우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로 기본수당과 상여금, 장학혜택 등이 지원되는 것으로 협의체와는 분명한 차등적인 역할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회의참석 수당과 같이 실비지원의 경우는 통장과 협의체 간 지역 내 기여와 역할 측면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주민자치회의 실비성격의 회의참석수당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상호 간 형평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
 - 특히 협의체의 경우는 단순한 봉사단체나 개별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업무를 지원 및 지지하는 역할을 함으로 이러한 활동에 소요된 실비는 현실화가 필요함
 - 또한 주민자치회의 경우는 회의 참석 시 수당이 지원되나 동 협의체의 경우는 수당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월1만원이며 이 또한 대부분 회비로 납부함으로 협의체 위원의 상실감과 이탈이 우려
 - 가령, 대전 5개구 가운데 중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총 4곳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는 명예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 대전시 서구의 경우 1인당 최대 1만8000원, 유성구는 1인당 최대 10만 원, 대덕구는 1인당 최대 2만8000원을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매달 회의 수당 및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동구는 최근 '대전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회의수당(1인 당 3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중(출처: 뉴스티앤티 <http://www.newstnt.com>)
 - 경기도 내 A시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4만원의 참석수당이 지원되며 수원시의 경우 월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동 협의체 보다는 높은 수준의 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V-5〉 동 협의체,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구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조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제7조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역할	1. <u>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대상자"라 한다) 발굴업무</u> 2. <u>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u> 3. <u>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u> 4. <u>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업무</u>	1. 통·반 관할 지역주민 생활지원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여망 사항 보고 3. 통·반 행정수행 제반사실 확인 4. 통·반 주민의 민방위 훈련 5. <u>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및 위기 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u> 6. 전사 홍보 및 주민계도(전사에 한함) 7. 전사자원의 동원과 배급(전사에 한함)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 <u>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u>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지원 규정	지원규정 없음	조례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매월 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원범위	1회 1만원(월1회)	회의수당: 1회 2만원(월2회) 기본수당: 월20만원 상여금: 설·추석 각 20만원 자녀 장학금	1회 5만원(월 1회)
재원	도비	시비	시비

□ 협의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실비지원의 근거규정 마련

-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⑧항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을 제시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며 수원시의 조례로 규정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이 됨
-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내 포함
- 또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전문위원회에 한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원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원(제15조 수당)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이를 확대하여 동 협의체 위원의 실비지원 근거 마련
 - 현행 협의체 조례에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전문위원에게만 참석수당이 지원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1조(목적),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수원시 협의체 구조 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계적이진 않지만 통합적인 협의체 기구로 명시
 - 이를 통해 동 협의체 위원 또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적용 내에서 참석수당에 대한 실비변상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타 유관 기구와 형평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동 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촉진하고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같이 유사한 역할의 동 단위 기구 및 위원회 간 실비보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 필요
 - (협의체 내 위원 간 형평성)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전문위원까지는 실비보전(참석수당)이 규정되어 있으나 일전에서 지역주민으로 동 복지 업무에 지원 및 연계하는 동 협의체 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보전의 규정이 부재함으로 이를 개선 필요
- 오산시, 논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읍·면·동 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한 실비지원 근거를 협의체 운영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표 V-6〉 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안)

개정 목적	<p>-(타 유관 기구와 형평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동 협의체 위원 의 활동을 촉진하고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같이 유사한 역할의 동 단위 기구 및 위원 회 간 실비보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p> <p>-(협의체 내 위원 간 형평성)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전문 위원회까지는 실비보전(참석수당)이 규정되어 있으나 일전에서 지역주민으로 동 복지업무에 지 원 및 연계하는 동 협의체 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보전의 규정이 부재함으로 이를 개선함</p>	
근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내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포함되어 구성(조례 제1조, 제6조)
개정 안	현행	개정(안)
	<p>제15조(수당 등)</p> <p>대표·실무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 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 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제15조(수당 등)</p> <p>대표·실무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u>동 협의체</u>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 석한 경우는 제외한다.</p>
유사 사례	통장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② 매월 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자치 위원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오산시 협의체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20조(회의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 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 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동 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논산시 읍면동 협의체	논산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교육 및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사회복지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행사를 실시 할 경우, 이에 대한 소요경비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Ⅵ. 결론

□ 동 단위 주민 및 유관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을 위한 공공의 노력 필요

-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의체 위원의 자발성과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촉진하고 육성하는 공공의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동 단위에서 활동하는 주민은 봉사동기로 인해 활동하게 됨으로 직무로서의 역할부여를 강요할 수 없음으로 간접적인 수단과 노력이 필요
 - 동 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 지역 주민 대상 시민복지대학 등의 운영은 지역 내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시민을 육성하는 간접적인 노력임
 - 협의체 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제반사항(실비지원, 조례 정비 등)을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지속할 수 있음
- 동 단위에서 활동하는 유관 단체들 간 연계 협력을 위한 공공의 노력
 - 동 단위에서는 약 7~10개의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동 협의체와 기능과 구성의 법적 기준이 유사한 단체 간에는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
 - 그러나 단체는 각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활동하게 됨으로 타 단체나 기구의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음
 - 즉 동 단위에서 협의체가 타 단체나 기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 협의체 민간위원장이나 위원의 개별적 역량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존재
 - 수원시의 우수 사례처럼 동협의체 담당 팀장이 타 단체 및 기구의 정례회의에 배석하여 지속적인 사업홍보와 연계점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동 협의체의 운영과 안정성을 위한 조례 개정

- 최든 동 단위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지원적 당위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민자치회 사업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 이는 상위 법이 특별법 형태로 존재하여도 자치단체 내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는 전국에서 2개의 자치단체에서 별도 조례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2021년 9월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와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읍면동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수원시도 경기도 내 최초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고려

- 동 협의체를 위한 조례는 향후 주민자치회의 확대에 따라 역할 중복 방지와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판단됨

□ 동 협의체 위원의 내적 역량강화와 외연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 추진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많은 특화사업의 운영이나 지원실적만을 중심으로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공무원과 참여주민 모두에서 ‘봉사동기’에 의한 활동이 아닌 ‘실적동기’에 따른 활동을 요구하게 됨

○ 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봉사 동기’를 촉진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봉사동기의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검토가 요구됨

- 협의체 위원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이며 월 1회 회의참석과 수시로 이어지는 특화사업 및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발굴에 참여하는 것은 협의체 내 민간 임원단들 및 위원들에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음

- 이에 협의체 위원들도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여가문화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수원시 차원에서 기획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FGI 결과에서도 협의체 위원들이 뭔가 배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를 기대하는 의견이 일부 도출되기도 함

참고문헌

〈국문논문 및 보고서〉

- 김남욱(2021). “주민자치회법의 합리적 제정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1(2):35~76.
- 김동철·김대건(2021). 『시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춘천시 주민자치회 전환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0(3):3~29.
- 김필두·한부영(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보고서.
- 박광표·김동철·김대건(2020).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 춘천시 신사우동 주민자치회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31(1):73~95.
- 박상범·복문수(2019). 『주민자치회 활성화 영향요인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 광주·전남 지방 자치회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3):81~110.
- 안기덕(2019).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 이현우·최준규(2019).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조직 체계 - 일본 주민조직사례를 중심으로』 월간 주민자치, 89권.
- 전준구(2020). 『복합체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도설계의 논리와 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34(4):91~113.
- 채현탁(2018). 『지역사회 복지의제의 정치 담론화 과제에 관한 연구-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6(66):85~116.
- 최인수·전대욱·장인성(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하경환(2019). 『새로운 주민자치회의 정책방향』,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함철호(2019). 『농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A면의 경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3(63):59~96.
- 허숙민·박태영(2019). 『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1(71):211~237.

부록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수원시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탁을 받아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경기복지재단

문의 : 김주연 연구원(031-267-9384, jykim@ggwf.or.kr)

※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속	파장동	울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입북동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광교1동	광교2동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연령	①40대 이하 ②50대 ③60대 ④70대 이상						
성별	①남 ②여						
직위	①위원 ②위원장						
소속(참여자격)	①공무원 ②주민 ③복지시설 종사자						
협의체 위원 활동 기간	()년 ()개월						

1. 협의체 활동 일반 현황

1. 귀하께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이외 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복수응답)

- ①주민자치회 ②통장협의회 ③새마을협의회 ④새마을부녀회 ⑤새마을문고
 ⑥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⑦자율방범대 ⑧방위협의회 ⑨마을만들기협의회 ⑩적십자봉사회
 ⑪생활안전협의회 ⑫방범기동순찰대 ⑬자유총연맹 ⑭노인회 ⑮기타() ⑯해당없음

2. 귀하께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 ①동장 등 공무원의 권유 ②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위원의 권유 ③동 행정복지센터 공개모집 홍보물 보고 지원
 ④협의체 위원의 활동현장을 목격하고 함께 참여하고 싶어 지원 ⑤기타

3. 귀하께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관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 ②주민이 동 행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가교역할
 ③사회공헌을 위한 봉사 단체 ④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역할

4. 귀하께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고 즐거운 사업유형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3개)

- ①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가구방문 사업 ②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모니터링/지원 사업
 ex)가구방문, 취약계층 일제조사 등 ex)1:1안부확인 결연, 야쿠르트 배달, 말벗서비스 등
 ③주거환경 개보수 등 주거복지지원 관련 사업 ④후원개발, 자원공유 등 사업
 ex)집수리 활동, 청소, 도배장판 등 ex)공유냉장고, 후원처 현판부착, 후원익밤, 축제참여 등
 ⑤1화성이지만 여러 위원이 참여하는 사업 ⑥거리홍보 등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ex)김장김치, 복달임, 어르신 생일상 등 ex)길거리 홍보, 장터홍보 등
 ⑦장학사업 ⑧1:1 결연후원 사업
 ex)취약아동청소년 대상 장학금, 용돈 등 ⑨나들이 등 여가지원 사업
 ⑧재능기부 사업 ⑩선풍기, 마스크, 방역소독, 빨래 등 생활지원 사업
 ex)미용서비스, 요리교실, 공예, 반려식물가꾸기 등 ⑪음식나눔 사업 ⑫선풍기, 마스크, 방역소독, 빨래 등 생활지원 사업
 ex)정기적 밑반찬 지원, 식사 대접 등

5. 귀하는 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매우 불만족(5-1번 이동) ②불만족(5-1번 이동) ③보통
 ④만족(5-2번 이동) ⑤매우 만족(5-2번 이동)

5-1. 협의체 활동에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모임(회의) 횟수가 많아서 ②위원 간 불화 및 갈등 ③사업목적에 동의가 안되서
 ④참여수당, 실비지원 등이 미흡해서 ⑤행정복지센터와 성향이 맞지 않아서

5-2. 협의체 활동에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위원들 간 활동이 재미있어서 ②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③우리 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월 정례적 회의 시 추진 사업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II. 지역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1.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00동 지역의 문제나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전혀 모른다 ②모른다 ③보통이다 ④잘 안다 ⑤매우 잘 안다

2. (위원이 생각하는 00동에 대한 인식)귀하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우리 동(洞)의 주민들은 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洞)은 상부상조의 정신이 상당히 남아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동(洞) 주민들은 평소 주변 이웃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洞)에는 주민끼리 협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동(洞) 주민은 축제, 장터 등 공동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동(洞)의 각 사회단체들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동(洞)의 각 사회단체들은 각 단체 간 연합행사 등 연계/협력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00동에 필요한 시설/공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1) 북 카페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한 여가시설	5) 문화센터	9) 보건의료 관련 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6)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교실	10) 기타()
3) 기부활성화를 위한 나눔 공간(예. 물품 나눔공간, 공유생장고 등)	7) 도서관	
4) 노인복지를 위한 요양/재가/여가 시설	8) 스포츠센터	

6.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00동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1) 불우이웃 돕기(취약계층 지원)	5)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9) 차안과 안전 문제 개선
2) 노인복지 서비스와 시설 개선	6) 거리청소 및 분리수거함 설치	10) 영유아/아동 양육을 위한 시설 확충
3) 도로 및 인도 정비 등 마을가꾸기	7) 협의체 위원을 위한 모임 공간	11) 보건소 등 공공 보건환경 개선
4)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복지	8) 도서관/문화시설 확충	12)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환경 개선

7.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00동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마을재난안전	동(洞)의 생활안전 강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예) 범죄예방, 교통안전, 재난/재해 대비			
	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다	③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2) 마을복지 공동체	동(洞) 내 환경가꾸기,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 (예) 봉사활동, 마을벽화, 마을 화단, 경로당, 도서관센터 등			
	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다	③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복지서비스' (예) 방문건강관리, 안부확인, 도서관 등 식사배달, 등			
	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다	③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4) 마을평생교육	동(洞)주민의 수요,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다	③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5) 마을자원개발	동(洞)의 명소,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예) 마을 축제, 마을 행사, 마을 장터, 마을 문화관광			
	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다	③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6) 주민의식 교육	동(洞)의 주민리더들의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예) 정책 변화 교육, 사회복지교육, 마을공동체교육 등			
	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다	③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Ⅲ. 활성화 방안

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위원 대상 지속적인 리더역량 교육 ②회의참여수당 등 지원범위 확대 ③여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 개발 확대
④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지원 ⑤협의체 위원 수의 확대

2. 귀하께서는 향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선정방식은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공개모집을 통한 모집 비중을 늘려야 함 ②동장 및 팀장의 추천 및 권유(섭외)에 의한 모집 비중을 늘려야 함 ③협의체 민간위원의 권유와 추천을 통한 모집 비중이 늘려야 함
④기관 및 단체의 당연직 비중을 늘려야 함 ⑤기타()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협의체 위원들 간 관계 ②실질 경비(수당)의 지원 부족 ③과도한 사업수행 및 참여 요구
④사업예산 부족 ⑤협소한 사업범위 ⑥기타()

4. 귀하께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인원은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20명 이하 ②21~30명 이하 ③31명~40명 이하
④40명 이상

5. 귀하께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이며 향후 확대설치 계획인 “주민자치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알고 있다.(6번으로 이동) ②모르고 있다.

6. 귀하께서는 향후 “주민자치회”가 설치 될 경우 주민자치회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운영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동 협의체와 주민자치회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동 협의체가 주민자치회 내 하나의 분과로 소속되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